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610-01

정책보고서 2015-83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최복천 · 김미옥 · 김주영 · 성명진 · 전해인 · 제철웅 · 오다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4(공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교수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대표

전혜인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1981년 제정한 이후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준하여 장애아동 및 장애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거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으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인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고, 다른 비장애인이 당연시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로부터 오랫동안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수립하고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발달장애인 지원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의 많은 내용들이 그 동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욕구에 조응하는 서비스 개발 및 제도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특히 ‘성년후견제’(제9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제11조),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제15조) 및 ‘보호조치’(제1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26조), ‘보호자 상담지원’(제31조)에 관한 정책적 정의 및 범위,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수행되었

다. 아울러 향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이들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지침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복천 연구위원의 총괄책임하에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대표, 전해인 건양대학교 교수,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오다은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양성일 장애인정책국장, 한상균 장애인서비스과장, 유동욱 사무관, 정지영 주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제2절 연구방법	9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12
제2장 평생교육	32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52
제2절 국내외 현황	82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34
제4절 시행방안	5
제3장 위기발달장애인	96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국내외 현황	67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29
제4절 시행방안	10
제4장 성년후견법인	1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국내외 현황	15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8
제4절 시행방안	13

제5장 자조단체	16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국내외 현황	10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8
제4절 시행방안	13
 제6장 부모(보호자)동료에 의한 상담	17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국내외 현황	17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8
제4절 시행방안	19
 제7장 결론 및 제언	15
 참고문헌	203

표 목차

<표 2-2-1>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현황	4	3
<표 2-2-2>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6	3
<표 2-2-3>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비교	7	3
<표 2-2-4>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와 계열별 교습과정	8	3
<표 2-2-5>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0	4
<표 2-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4
<표 2-3-1> 집단면담 시 주요 질문 내용	3	4
<표 2-3-2> 평생교육 운영체제 문제점에 관한 의견들	4	4
<표 2-3-3> 별도의 평생교육기관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	5	4
<표 2-3-4>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들	5	4
<표 2-3-5> 지역사회 및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의견들	6	4
<표 2-3-6> 전일제형태의 평생교육과정에 관한 의견들	7	4
<표 2-3-7>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의견들	8	4
<표 2-3-8>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구성에 관한 의견들	9	4
<표 2-3-9> 기본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에 관한 의견들	0	5
<표 2-3-10> 교육 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의견들	1	5
<표 2-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3	5
<표 2-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안)	9	5
<표 2-4-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안)	1	6
<표 2-4-4> 교육제공인력의 역할	4	6
<표 2-4-5> 교육제공인력별 기관의 종류에 따른 자격 요건	5	6
<표 2-4-6> 교육제공인력별 직무교육 과목과 시간	7	6
<표 3-2-1> No secrets 구성	7	7
<표 3-2-2> National Framework 실천 표준	9	7
<표 3-2-3> 학대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1	8
<표 3-2-4> 인권침해장애인쉼터 현황	7	8
<표 3-2-5>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지역별 설치 현황	8	8
<표 3-2-6> 유사분야 쉼터 기준 비교	9	8
<표 3-2-7> 유사 쉼터 현황	0	9
<표 3-2-8> 학대신고 의무현황	1	9

<표 3-3-1> 쉽터의 운영주체관련 의견	4	9
<표 3-3-2> 장애인단거주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안의 장단점	4	9
<표 3-3-3>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안의 장단점	5	9
<표 3-3-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안(제3안)	5	9
<표 3-3-5> 쉽터 입소기간 관련에 관한 의견들	6	9
<표 3-3-6> 쉽터 제공 서비스에 관한 의견들	7	9
<표 3-3-7> 쉽터 인력 및 시설 환경에 관한 의견들	8	9
<표 3-3-8> 쉽터 퇴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들	8	9
<표 3-3-9> 신고의무교육에 관한 의견들	0	0 1
<표 3-4-1> 운영주체별 쉽터 위탁 운영 방안과 주요 장단점	2	0 1
<표 3-4-2>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본 위기발달장애인 쉽터 운영 방안	3	0 1
<표 3-4-3> 쉽터의 기능 및 서비스(안)	5	0 1
<표 3-4-4> 신고의무교육내용(안)	0	1 1
<표 4-2-1> 유형별 후견인의 현황	8	1 1
<표 4-2-2> 일본의 성년후견인 유형별 현황	2	2 1
<표 4-2-3> 후견신청 처리 현황(2013.7.1~2015.4.30)	5	2 1
<표 4-2-4> 유형별 후견인 현황(2013.7.1~2015.4.30)	6	2 1
<표 4-2-5>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 유형(2013.7.1~2015.4.30)	6	2 1
<표 4-2-6> 지역별 공공후견 판결 현황(15.5. 현재)	7	2 1
<표 4-2-7> 유형별 공공후견지원사업 청구 실적(13.9.1~15.6.30)	7	2 1
<표 4-2-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실적(13.7.1~14.11.30)	7	2 1
<표 4-3-1> 후견법인의 역할에 관한 의견들	9	2 1
<표 4-3-2>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의견들	0	3 1
<표 4-3-3> 후견법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의견들	0	3 1
<표 4-3-4>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의견들	2	3 1
<표 4-4-1> 적정 규모의 후견지정 방안	7	3 1
<표 4-4-2> 공공후견사업 추진주체별 역할과 기능	0	4 1
<표 5-1-1> 독립성에 기초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유형	0	5 1
<표 5-2-1> 리더와 조력자의 역할	2	5 1
<표 5-2-2>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사례	5	5 1
<표 5-2-3> 거주 시설 기반의 자조모임 활동 사례	5	5 1

<표 5-2-4>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 양성교육의 예시	6·5·1
<표 5-2-5> 2015년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	7·5·1
<표 5-3-1> 집단면담 시 주요 질문 내용	9·5·1
<표 5-3-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주요 활동영역에 관한 의견들	0·6·1
<표 5-3-3> 조력자의 자세에 관한 의견들	1·6·1
<표 5-3-4> 자조단체 교류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들	2·6·1
<표 5-3-5> 전국 당사자 교류 대회에 관한 주요 의견들	3·6·1
<표 5-4-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 내용	7·6·1
<표 5-4-2> 자조활동 프로그램 예시	8·6·1
<표 5-4-3>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 예시	8·6·1
<표 5-4-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을 위한 조력자의 지원 역할	9·6·1
<표 5-4-5> 조력자 양성 과정 교육(안)	0·7·1
<표 6-2-1> Parent to Parent 교육 사례	971
<표 6-2-2> 뉴욕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코디네이터의 역할	0·8·1
<표 6-2-3> 미주리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지원부모의 지원 내용	1·8·1
<표 6-3-1> 자격조건 완화 방안의 장단점	6·8·1
<표 6-3-2> 자격조건 강화 방안의 장단점	7·8·1
<표 6-3-3> 동료상담 활동지원에 대한 주요 의견들	8·8·1
<표 6-4-1> 지원부모 사전 교육과정(안)	3·9·1
<표 6-4-2> 동료 상담 방법의 예시	4·9·1

그림 목차

[그림 2-2-1] 미국의 발달장애인 중등과정 이후 교육 경로	0·3
[그림 3-2-1]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운영체계	7·0·1
[그림 4-2-1] 독일의 장애대리권 등록건수 연도별 추이(단위: 건)	6·1·1
[그림 4-2-2] 독일의 법적 후견 누적건수 연도별 추이(단위: 건)	7·1·1
[그림 4-2-3] 일본의 후견이용 연도별 현황	1·2·1
[그림 4-2-4] 법인후견 후견선임 연도별 추이	3·2·1
[그림 4-2-5] 제3자 후견인에서 법인후견이 접하는 비율의 추이	3·2·1

[그림 4-2-6] 지방자치단체 후견심판 청구 건수	4·2·1
[그림 4-4-1] 후견법인이 있는 경우 후견신청 경로	1·4·1
[그림 5-2-2] 한국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포스터	8·5·1
[그림 6-4-1] 사업 내용 및 절차	291
[그림 6-4-2] 지원 절차	49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4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는 미비함.
- 발달장애인법은 평생교육, 위기발달장애인 보호조치, 부모동료에 의한 상담 등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도 마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규서비스와 제도는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시행에 앞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정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방안을 영역별로 모색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각 영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 기관 지정, 교육과정 구성, 제공인력의 자격 및 교육 등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쉼터 운영, 신고의무교육 시행 등

- 성년후견법인: 법인 지정요건 및 절차, 법인의 주요 역할과 기능, 지원 등
- 자조단체: 자조단체 특성과 지원 방식, 자조단체 지원사업 운영 등
- 부모동료상담: 상담 활동 자격기준, 상담 사업 운영 등

2. 연구결과

가. 평생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 중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왔음. 또한 중등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상위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년여의 전공에 물리고 있으며 이후 더 이상의 교육기회가 없어 기술의 퇴보, 자립생활 능력획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이에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전생애 걸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이 평생에 걸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 현황

- 2013년 현재 장애인이 교육받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232개 기관이며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1,72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7.6%이고 기관의 형태는 특수학교,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 야학, 시·도 평생학습관 등임
- 그러나 전체 평생교육기관(3,768개소) 중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비율은 6.2%에 불과하며 참여인원은 전체 장애인은 전체 참여율의 0.02%,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0.01% 지나지 않음
- 이렇게 저조한 수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물리적 접근성이나 장애에 따른 지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고 이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평생교육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외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에 있어서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제공함.

- 미국: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적 경로를 통해 평생교육을 보장받고 있음
- 일본: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각 기관이 특성과 역할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의 성인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특별지원학교가 자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칼리지에서는 주로 지적장애인에게 대학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개선에 목적을 둔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대안적 경로와 같은 구조를 통해 현재 전공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등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줌. 또한 일본의 특별지원학교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오픈칼리지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모형 개발에 시사점이 큼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교육청과 지자체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문제가 발생함
 -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전일제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장단점 논의
 - 최소한의 필수과목 및 개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 기본교육 교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함
 - 교육관리자: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전문 인력으로 배치가 필요함

- 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에 준하는 인력이 가장 적절함

□ 시행방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대상/지정 기준(교육과정·교육제공인력·시설설비
요건)/ 지정절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

-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의 정의/과목별 내용과 시수/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 교육제공인력과 교육 방안

- 교육제공인력의 정의/역할과 자격요건/제공인력을 위한 교육(교육의 종류/
시점, 기관 및 내용, 보수교육)

나. 위기발달장애인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더 많은 학
대와 방임의 위험에 직면해있으나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관련한 학문
적,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현재 장애인 쉼터는 현
재 4개소만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재학대 및 피해
의 증증화 역시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쉼터와 관련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현황

-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쉼터는 현재 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 각 1
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
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음

- 노인 및 아동분야의 유사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쉼터 1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7개소 이주여성쉼터 25개소 청소년쉼터 109개소가 있음. 이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는 인권피해장애인쉼터 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개소 중 8개소가 있음

□ 위기발달장애인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발달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함
 - 영국: No Secret등은 정부 부도로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보급하여 민관기관들을 선도함
 - 일본: 별도의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있음
-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수적임
 - 영국, 일본: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만들어 배포함
- 위기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일본: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에 긴급 입소를 요청하여 그룹홈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단기 및 시설 입소가 이루어짐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결과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 운영주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각각 위탁 및 운영하는 3가지 안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제시됨
 - 입소기간: 현재 명시된 최대 14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기 및 중장기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보호기능뿐 아니라 심리치료, 법률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쉼터의 운영: 거주시설에 비해 인력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정과 같은 설비가 구축되어야 함
 - 퇴소 후 사후관리: 시설보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신고의무기준
- 신고의무자: 법에 명시된 다양한 관련 직종이 모두 필요하며 각 기관들이 연계되어야 함
 - 신고의무교육(안):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시행방안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 운영주체에 따른 방안 별 장단점
- (1안)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나 고유목적에 맞는 운영이 어렵고 기존 이용자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2안)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초기세팅비용이 절감되나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로 고착화 될 수 있고 센터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움
 - (3안)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상자 발굴이 쉽고 정보 및 지원접근성이 용이하며 피해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초기 비용이 증가하고 감독이 어려우며 센터 고유 기능이 약화 될 수 있음
-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 일시보호(3일 이내): 긴급 의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와 숙식제공 등의 일시보호 서비스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보호 여부를 결정함
 - 단기보호(7일 이내):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통해 중장기보호 및 향후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치료지원서비스,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짐
 - 중장기보호(3개월 이내): 집중적 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후지도를 모색해야 함

－ 센터의 운영

- 인력: 장애정도 및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인력지원기준이 고려되어야 함
- 시설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준하여 소규모를 지향하되 개별공간제공 등도 검토되어야 함
- 운영체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단위로 총괄관리 및 점검을 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해야 함.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 퇴소 후 사후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외에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보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 신고의무교육

－ 교육 주제 및 교육 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학대민감성, 위기발달장애인 발견 시 초기대응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 교육시간: 2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다. 성년후견법인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후견서비스를 지원 및 관리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함. 이는 후견법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 후견법인은 개인 후견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단절,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성년후견법인의 지정 및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내 현황

-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후견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

나 치매환자가 대다수이고 장애인을 위한 후견신청 건수는 많지 않음

- 선임된 후견인중 성년후견인이 약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후견인과 후견인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후견심판청구지원과 공공후견인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후견심판 청구지원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은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2015년 5월까지 총 226건이 이루어졌음

□ 후견법인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후견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일반인 및 이용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독일, 일본: 후견제도의 적정이용,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 홍보사업과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함

○ 시민후견인후보자 교육양성기관과 후견법인을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독일, 일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법인이 직접 시민후견인후보자를 양성하거나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여 교육과 업무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결과

- 후견법인의 역할 및 지정 요건

- 후견법인의 역할: 후견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양성과 발굴, 홍보 활동 등이 요구됨
- 후견법인의 지정: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받는 것이 적절함

- 후견법인 직원:

- 직원의 자질 및 업무량: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 행정처리 능

력 등이 자질로 강조되었으며 업무량에 대해서는 5~20건까지 다양함

- 후견인후보자의 활용: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후견인후보자를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일상지원의 조력 등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지침제공과 총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지역 센터: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후견서비스 제공자 조직,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됨

□ 시행방안

○ 후견법인 지정 요건

- 기본 고려 사항: 후견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정 요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지향성, 후견업무 전문성, 법인의 공익성과 공공후견사업 충실성,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역량, 지역 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후견법인 지정 규모

- 기본 지정: 서울2개, 인천·경기 2개, 충청권, 영남, 호남 각각 1개법인 등 총 7개 후견법인 우선 지정
- 추가 지정: 후견신청 또는 후견서비스제공이 50건 이상, 후견감독건수가 2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1개의 단위로 설정하여 추가 지정

○ 후견법인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

- 신청: 법인 증명, 직원의 이력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을 첨부함
- 심사와 선정: 3년 단위로 선정하여 재심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함

○ 후견법인 운영방안

- 후견법인의 주요 역할과 기능: 후견신청사무,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

스 제공, 후견인후보자의 교육 및 양성, 홍보활동

○ 공공후견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 고려
- 현행의 교육기관, 공공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라. 자조단체

□ 필요성 및 배경

- 자조단체는 전문가나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인 관계를 주도하는 상호호혜적인 모임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실현하는 권리보장의 장이 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는데 있어 무엇보다 효과적임
- 일부 장애인과 부모관련 단체들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고 최근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원방안관련 논의가 요구됨

□ 국내현황

- 국내 자조단체: 자립생활센터, 부모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거주시설 등 기관의 지원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조단체가 시작됨
- 자조단체 대회: 단체 간의 교류, 자조활동 사례 공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권리, 일상, 여가, 직업, 이성 관계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옹호하는 내용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오고 있음

□ 자조단체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해외에서는 사회적 이념에 기초하여 자조단체가 성립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뿐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화를 형

성하게 함

- 초기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험의 기회를 통해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옹호조직으로 발돋움 함. 활동내용은 교육권, 의료권 등의 소극적 옹호에서 홍보, 캠페인, 참여권, 삶의 질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로 변화하고 발전함

□ 전문가 의견 수렴

○ 결과

- 자조단체 활동 내용 및 지원
 - 사회참여활동 촉진: 연령 및 특성에 맞게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장소의 선택권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야 함
 -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함
 - 자기옹호역량 강화: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수행하도록 함
- 조력자의 역할과 지원: 조력자는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림자가 되어야 하며 수직적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 맺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조단체 교류 지원: 자조단체들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며 조력자 역시 타 단체와의 교류가 성장의 기회가 됨.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행방안

-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발굴·육성하고, 발달장애인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자조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을 고양하고자 함
- 사업 대상: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이 구성원으로 현재 자조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그룹 또는 단체
- 사업 지원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자조활동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 사업 내용

- 자조활동(기본): 발달장애인과 조력자가 대상이며 사회활동, 옹호, 자립생활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함
- 자조단체 교류(선택): 발달장애인과 조력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교류, 자조단체대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함
- 조력자 교육 및 양성(선택): 조력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력자 역량강화와 양성교육(총 30시간)을 진행함

마.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

□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크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지원의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이에 전문적인 상담 외에도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장애특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과 구체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현황

- 장애인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라는 공통된 경험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개별 및 집단으로 상담이 지원되고 있음
-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을 통해 장애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미리 일정시간동안의 교육을 받고 어린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지원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 참여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 강화에 공

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됨

□ 부모동료상담관련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동등한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의 공감에 의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임
 - 미국: P2PUSA(parent-to-parent program USA)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과 연결시켜주어 일대일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도록 함
- 상담을 제공하는 부모를 위한 사전교육은 지원받는 부모와의 만남에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함
 -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2시간 내외로 장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을 통해 이루어짐
- 상담을 제공할 때 교통비나 운영비 이외에 상담 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지원의 순수성과 자발성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수렴

- 결과
 -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및 교육(2가지 안 제시)
 - 기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 조건 완화 방안: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육시간은 6~20시간이 적당함
 -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조건 강화 방안: 지원부모가 되기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시간은 200~300시간 정도 필요함
 - 부모동료상담 운영
 - 상담자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수 없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음

- 집단 만남, 온라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함

□ 시행방안

-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기준: 엄격한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시간도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여 20시간 교육을 최소 조건으로 함
- 부모 동료상담 사업 운영 방안
 - 사업 수행 기관: 향후 전국적으로 설치 마련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역할을 맡는 방안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및 절차
 - 지원부모 교육 및 선정: 20시간의 사전 부모 동료상담 교육 최소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원 가능
 -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 부모 연결: 자녀의 장애 유형, 성별 등을 고려함
 - 부모 동료 상담 실시: 일대일, 집단,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 실시
 - 모니터링과 지원: 서비스 실시 확인 및 상황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1981년 제정한 이후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장애인연금법」(20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제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요 생활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정책들이 강구되어 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 및 장애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거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향유와 동등한 사회참여라는 선언적 권리규정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에서 구현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으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인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고, 다른 비장애인이 당연시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로부터 오랫동안 박탈되어 왔다. 또한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장애인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인 우선과제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수립, 제 4차 장애인정

책중합계획(2013~2017)에 ‘발달장애인 지원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국가적 책무성이 부여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발달장애인가족과 장애인단체, 특히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해 온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 제정 노력이 맺은 결실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이들의 권익보호 및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담아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제8~17조)과 이들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38조)의 설치 및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보장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단체 결성지원(제11조)’의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형사·사법절차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였으며(제12조),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전담조사제(제13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제15조)’와 피해자에 대한 ‘현장조사(제16조)’와 ‘보호조치(제17조)’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복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선택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에 대한 내용,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제25조)과 평생교육기관 지정(제26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로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휴식지원 등(제30~32조)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한 장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의 많은 내용들이 그 동안 국내에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욕구에 조응하는 서비스 개발 및 제도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은 평생교육, 위기발달장애인 보호조치, 부모동료에 의한 상담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도 마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안 마련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미비하고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정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이들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방식, 제공기관 및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제11조),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제15조) 및 ‘보호조치’(제1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26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제31조)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등이 활용되었다. 먼저, 평생교육, 자조단체, 학대 및 폭력, 부모동료상담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각각의 정의 및 개념, 필요성,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유사 사례 및 서비스 현황,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신설 또는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신규제도 및 서비스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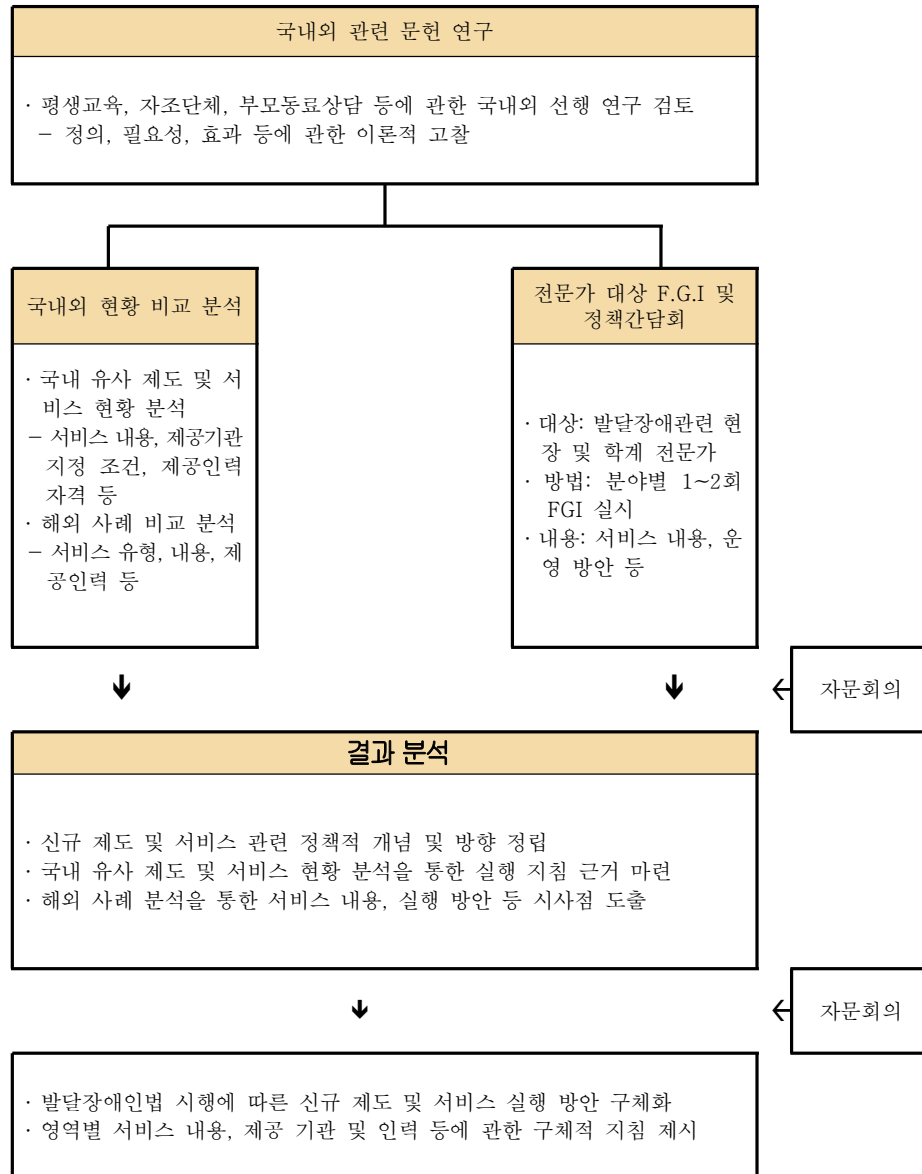
평생교육, 자조단체, 학대 및 폭력, 부모동료상담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 전문가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및 자문회의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신설 또는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침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제 2 장

평생교육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국내외 현황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제4절 시행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필요성

출생 후 주어지는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구조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이라는 구조를 통해 특정사회에 소속되며, 그 구성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장과 자립에 이르며, 마침내 자아를 실현하고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개체이자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권리로서 출생과 동시에 천부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장애유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교육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의 특정 시기에만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필요에 따라 형식화되지 않은 사회교육 형태로 주어지는 것에 만족한 적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1967년 유네스코(UNESCO)의 성인교육추진위원회에서 폴 랭그랑(Paul Lengrand)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처음 언급하였다(이승현, 2014).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더불어 1995년부터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과정의 보육 및 전공과 과정의 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왔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그 규정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된 연원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추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장애나 지체장애인과 달리 중등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상위학교(대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년여의 전공과 과정에 몰리고 있으며, 이후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기초생활기술의 퇴보와 지역사회 적응 곤란, 자립생활능력 획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학령기 이후(중등학교 졸업 이후)를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이 평생에 걸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2. 개념 및 정의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 즉 평생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전공과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그동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워왔던 기초생활기술을 점차 잊어버리고 지역사회 적응에도 어려워하며, 자립생활능력 유지에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서는 학령기 이후 중단될 수 있는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4년(5월 20일) 법률(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며(제1항),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제2항)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제3항) 하고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이란,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가운데서 발달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이란,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꼭 배워야 하는 조직화된 교육 내용(지식)을 포함한 일정한 교육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굳이 따로 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동법에서 말하는 ‘교육제공인력’이란, 다른 학습자와 달리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평생교육 활동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운영관리자, 교육관리자, 기본교육교사, 교육보조원 등이 있다.

제2절 국내외 현황

1. 해외 사례

가. 미국

1) 법률적 현황

미국의 평생교육은 1976년 학습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법」(The Lifelong Learning Act, 1976)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틀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반면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04)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은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의 여덟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규정된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연구 및 서비스를 위한 대학센터(University Centers for Excellenc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s)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의 역량강화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교육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활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모든 세부 분야까지도 학생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지와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전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동영, 2012).

200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중등과정 이후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으로, 지적장애학생을 포함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중등과정 이후 교육 접근과 성공을 위해 관련센터의 설립과 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정동영, 2012).

2) 제도와 현황

미국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합쳐 중등과정 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이라 정의하고 있으며(정동영, 2012), 발달장애인 중등과정 이후교육으로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비롯한 성인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중등과정 이후 전환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이 보장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 교육을 마치고 나면 보호작업장이거나 다른 지원고용 활동에 참여해 왔다(Hendricks & Wehman, 2009). 그러나 점차 대학들이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장애인들이 취해온 전통적 경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 경로를 통해 다양한 중등과정 이후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 경로를 통한 교육은 전형적인 입학심사를 받고 전형과정을 거쳐 입학하며,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필자, 통역사, 튜터링, 시험시간 연장, 상담과 같은 조정과 보조공학을 이용하여 모든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대안적(비전통적) 경로를 통한 교육(Hart & Grigal, 2009; Hart, Grigal, Sax, Martinez, & Will, 2006)은 이중 또는 동시 등록 프로그램(dual or concurrent enrollment program)과 대학주도 프로그램(college-initiated program), 개인 또는 가족 주도 지원 프로그램(individual- or family-initiated supports)로 분류된다. 이중 또는 동시 등록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의 전환활동 마지막 해에 대학에 입학하려는 18~21세의 발달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IDEA 기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특수교육 전환서비스의 일부로서 중등과정의 학교체제에 의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평생교육 강좌,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강좌 또는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발달적, 교정적 강좌만으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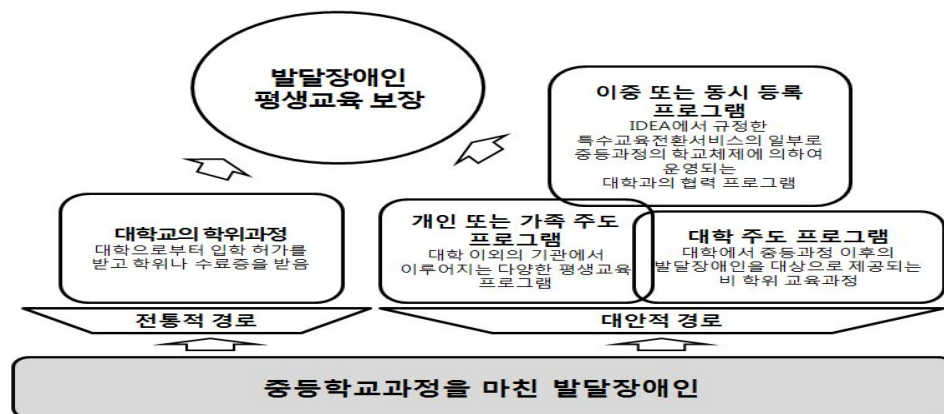
대학주도 프로그램은 대학 캠퍼스에서 중등과정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중 또는 동시 등록 프로그램과 동일한 범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등학교가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18~24세의 발달장애인을 2~4년 동안 지원하지만,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과 구조는 프로그램마다 매우 다르다(Grigal & Hart, 2009).

개인 또는 가족 주도 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관이나 학교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노력으로 접근하는 중등과정 이후 교육이다. 표준적인 대학입학 허가과정 대신 개별 교수들을 설득하여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직업재활기관, 성인서비스기관, 발달서비스 기관 등과 같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주민회관이나 지역사회 대학 및 4년제 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중 통합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rince & Jenkins, 2005). 중등과정 이후 발달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 즉 평생교육의 경로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2-2-1]과 같다(최복천 외, 2014).

[그림 2-2-1] 미국의 발달장애인 중등과정 이후 교육 경로



나. 일본

1) 법률적 현황

일본의 평생교육은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 및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간으로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실행되는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실시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모든 국민이 모든 기회, 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스스로 실생활에 부합하는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한 내용보다는 일반인의 평생교육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생활능력과 직업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송소현 외, 2010; 국립특수교육원, 2013)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사무소, 취업생활지원 기관, 장애인 청년학급, 특별지원학교, 오픈칼리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鳥雲 외, 2012).

장애인복지서비스 사무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개호급부: 요양보호, 생활보호)와 훈련 서비스(훈련급부: 자립훈련, 취업이행 지원, 취업계속 지원), 지역활동 지원센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생활지원기관은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준비나 직장개척, 취업 장애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특별지원 학급은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에 의한 학습상 또는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고 자립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장애인청년학급은 근로에 종사하거나 비종사하는 장애청년을 위한 직업 또는 가사

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일반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끝으로 오픈칼리지는 일본 내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주로 지적장애인에게 대학의 인적 자원과 관련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인기 삶의 질, 더 구체적으로는 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가) 장애인 청년학급

장애인 청년학급은 근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에 대해 실제생활에 필요한 직업 또는 가사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고 동시에 일반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정·촌이 개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청년학급의 이념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계속교육,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의 교류에 의한 또래상담, 생활체험의 확장,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자기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등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운영 상황을 보면, 장애인 청년학급은 통상 1개 학급에 참여자 수가 30인 내외로 하고 개설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학습시간 수는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문인력(2년제 대학 이상, 교원자격증, 사회교육 주사 등의 전문 자격 소지)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은 장애인을 위한 일반 교양 및 상식 강좌, 중고등학교 보충학습, 기타 장애성인의 취업, 직업유지, 지역사회 생활 학습 지역 특성에 관련된 내용 학습 등으로 실천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3).

나) 공민관

공민관은 일본의 시·정·촌 또는 그 외 일정한 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생활에 적합한 교육학술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교양 향상, 건강 증진,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 진흥,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교육시설이다.

다) 오픈 칼리지

오픈 칼리지는 일본에서 대학의 인적자원(교사, 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관련자원

(제도, 시설 설비 등)을 활용한 장애성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1995년 동경학예대학이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픈칼리지의 운영 목적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도 다른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며, 지적장애인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 자신감과 자기결정력 향상을 도모하며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지식과 정보, 인력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7년 기준 전국 21개 대학에서 오픈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별도로 다룬 현황보고서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평생교육의 현황 자료와 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추출하거나 유추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크게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이하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진 평생교육기관(이하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와 2011년과 2014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1) 평생교육기관과 현황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2012)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수는 3,768개이며, 프로그램 수는 178,971개, 학습자 수는 17,618,495명, 교·강사 수는 71,676명, 사무직원은 17,888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2). 시설별로 현황을 제시하면 <표 2-2-1>과 같다.

<표 2-2-1>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시설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총 계		3,768	178,971	17,618,495	71,676	17,888
학교 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10	59	1,390	54	27
	대학(원) 부설	403	26,920	845,860	15,825	1,881
원격형태		887	48,162	13,669,575	13,434	6,487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20	60,493	991,126	17,548	1,137
	산업체 부설	37	1,340	45,784	687	289
시민사회단체 부설		495	5,497	186,712	3,602	1,385
언론기관 부설		494	4,520	134,454	3,110	1,215
지식·인력개발 형태		727	13,108	840,451	8,527	3,499
평생학습관		395	18,872	903,143	8,889	1,968

<표 2-2-1>의 시설 구분에서 학교부설은 유·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가리키며, 원격형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사업장 부설은 산업체,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부대시설로 설립·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고, 시민사회단체 부설은 법인으로 행정관

청에 등록된 회원이 300인 이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소속회원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이며, 기관 언론기관 부설은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지식·인력개발 형태는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HRD)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존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의 평생교육기관을 가리킨다.

<표 2-2-1>에 의하면 기관의 경우 원격형태가 887개에 23.5%로 가장 많고, 유초중등학교 부설이 10개에 0.3%로 그 수가 가장 적다. 프로그램은 유통업체 부설이 60,493개(33.8%), 학습자 수는 원격형태가 13,669,575명(77.6%)로 가장 많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2>와 같다. 2012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의 58.4%, 프로그램의 61.4%, 교·강사의 59.7%, 사무직원의 67.4%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기관수는 서울이 13.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이 8.0개, 강원이 7.7개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7.7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2).

<표 2-2-2>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기관수	기관수/10만명당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총 계	3,768	7.8	178,971	17,618,495	71,676	17,888
수도권	2,201	9.2	109,867	14,881,360	42,807	12,061
비수도권	1,567	6.3	69,104	2,737,135	28,869	5,827
서울	1,354	13.8	74,496	13,606,180	28,081	8,775
부산	215	6.3	10,415	575,970	4,639	877
대구	175	7.2	9,257	683,718	4,052	869
인천	134	5.0	6,302	276,255	2,407	470
광주	106	7.2	3,840	165,241	1,929	374
대전	120	8.0	4,960	131,285	2,080	406
울산	66	6.1	4,540	127,618	1,343	167
경기	713	6.3	29,069	998,925	12,319	2,816
강원	113	7.7	3,456	73,270	1,514	379
충북	87	5.8	2,483	128,698	1,490	307
충남	111	5.5	6,342	157,019	2,395	550
전북	111	6.2	3,931	100,381	1,827	394
전남	106	6.1	5,256	142,294	1,636	344
경북	157	6.0	4,139	156,228	2,159	541
경남	173	5.5	9,640	250,888	3,395	540
제주	27	5.1	845	44,525	410	79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2).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현황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분석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장애인이 교육받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232개 기관이며,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3,619명으로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724명(47.6%)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현재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특수학교,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야학, 시·도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이다.

3)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비교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232개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며, 참여인원은 3,619명으로 0.0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참여율은 전체 참여율의 0.01%이다. 이렇게 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참여인원이 저조한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물리적 접근성이나 장애에 따른 지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2-2-3>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비교

구분	전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3,768개(100%)	232개(6.2%)	—
학습자 수	17,618,495명	3,619명(100%)	1,724명(47.6%)
학습자 비율	100%	0.02%	0.01%

나.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아닌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와 계열, 교습과정이 다양하고 설치와 폐지가 잦아 별도로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없어 그곳을 이용하는 참여인원이나 기관수, 장애인의 참여인원과 기관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표 2-2-4>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와 계열별 교습과정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옹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 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자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발췌.

다.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 또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평생교육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위낙 평생교육을 표방하는 기관들이 많은데다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과 별개로 많은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에서 사회전반적인 평생교육의 요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장애인들이 물리적 접근성이나 장애에 따른 지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실태조사 보고서(2011)에 따르면,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총 829개 기관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466개, 직업재활시설 120개, 생활시설 198개, 직업훈련기관 45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의 접근성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우수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시설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15,523명이다.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5>와 같다.

<표 2-2-5>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단위: 개, 명)

시설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총 계	829	3,812	115,523	4,650	3,817
생활시설	198	1,031	20,347	1,913	1,473
직업재활시설	120	311	11,417	274	297
지역사회재활시설	466	2,110	78,662	1,882	1,784
직업훈련기관	45	104	1,784	354	172
수도권	294	1,261		1,737	1,529
비수도권	535	2,551		2,913	2,288
서울	115	496		513	637
부산	45	200		315	203
대구	41	139		115	126
인천	46	224		330	291
광주	28	119		126	119
대전	29	125		148	75
울산	26	81		128	81
경기	133	541		894	601
강원	52	235		183	186
충북	49	206		231	335
충남	45	167		185	171
전북	48	244		293	162
전남	40	200		236	166
경북	85	408		467	297
경남	64	274		402	199
제주	31	153		84	168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11).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적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는 수도권이 전체의 33.1%, 교·강사 수는 37.4%, 사무직원 수는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지역적 분포는 자료가 미비하여 알 수 없다.

2011년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 참여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41.4%(약 47,826명)로 모든 참여자의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평생교육 참여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참여비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참여자의 42.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97.9%, 장애인체육시설 51.0%, 기타(장애인보호작업장 등) 90.9%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비율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0.0%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그 뒤로 인문교양교육(14.2%), 성인 기초·문해교육(10.0%), 학력보완교육(5.3%), 시민참여교육(3.0%) 순이었다.

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자료가 미비하여 밝혀지지 않는 수를 제외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과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합쳐 1,061개 기관에서 120,120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표 2-2-6> 참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49,550명(41.3%)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표 2-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유형	시설 구분	기관 수	참여 장애인 수	발달장애인 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야학, 시·도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기타	232	3,619	1,724(47.6)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829	115,523	47,826(41.3)
계		1,061	119,142	49,550(41.6)

※ (%) = 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비율

3. 시사점

외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에 있어서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적 경로(개인 또는 가족 주도 프로그램, 대학 주도 프로그램, 이중 또는 동시 등록 프로그램)를 통해 평생교육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2-1] 참조). 이러한 구조는 현재 전공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등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사무소, 취업생활지원기관, 장애인 청년학급, 특별지원학교, 오픈칼리지(우리나라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해당)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각각 그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성인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학교나 오픈칼리지의 프로그램은 중등이후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지원학교(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 해당)는 장애로 인한 학습 또는 생활 상의 곤란을 극복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칼리지의 경우 주로 지적장애인에게 대학의 인적 자원과 관련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개선에 목적을 둔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발달장애인 중등이후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같은 특별지원학교의 역할이 크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오픈칼리지의 역할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모형 개발에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232개)보다는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829개)이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41.6%로 모든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 등 일반 평생교

육기관의 장애인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대학의 전향적 문호 개방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집단면담은 11월 13일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도 깊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 <표 2-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여 면담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1> 집단면담 시 주요 질문 내용

주요 질문	세부 질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관의 범위와 지정 기관의 유형 지정 기관의 요건으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율 지정 절차에 대한 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지정을 위해 반드시 구성해야 할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의 필요성 평생교육사, 교육보조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설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그 외 적정 교육제공인력에 대한 논의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조사 결과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참여자들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평생교육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지자체인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적 운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운영주체 간의 서로 다른 입장과 책임 전가로 인하여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아래 참여자의 진술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교육청은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 업무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 속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평생교육 운영체제 문제점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평생교육 운영체제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이 어디까지 운영과 예산에 관여해야 할지 분명치 않음.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령기 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만을 관장하고 그 외의 평생교육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음 시·도는 물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관할하도록 미루고 있는 상황임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하였을 경우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참여자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과는 상이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표 2-3-3> 별도의 평생교육기관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별도의 평생교육기관 설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정도 차가 매우 큼. 따라서 1~2급의 발달장애인은 K시에서 설립 중인 발달장애 성인평생교육기관과 같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 발달장애인은 일반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할 경우 서로에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더라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가능한 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 평생교육기관 외에 현재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3-4>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만의 별도 교육기관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를 벗어나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분리된 삶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능한 한 평생교육도 통합된 함께 하는 그런 교육과정 체계를 제시하였으면 함 장기적으로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설치 및 운영이나 예산 지원체제로 볼 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알맞은 구조가 아닐까 함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이 이후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을 갖춘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참여자들은 장애인 지역사회 및 직업재활시설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 여러 제반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꼽았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들 시설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다는 점이, 반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성인기 삶에 있어 중요한 직업역량과 사회관계역량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이들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3-5> 지역사회 및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어 평생교육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은 편 • 평생교육 외에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및 부모의 편의성이 높을 수 있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인기 삶의 사회성 즉 성인으로서의 기술, 대인 관계 기술을 계속 익혀주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곳이 보호작업장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적으로 조금만 개선한다면 보호작업장은 보다 중증의 중증의 발달장애성인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은 보호작업장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보내는 곳임. 따라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도 학령기 이후에도 일상생활훈련, 기본 교육, 여가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로서는 평생교육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한다고 할 때 평생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

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일제 형태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적절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강하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먼저, 전일제 형태의 평생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을 줄이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일제 형태의 평생교육과정 운영방안은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을 기관중심으로 사고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출하였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처럼 하루 종일 한 기관에 머무르면서 짜여진 교육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전일제 형태의 평생교육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서로 다른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이용시간과 장소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표 2-3-6> 전일제형태의 평생교육과정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기관들을 찾아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능하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좋다고 생각함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한 기관 안에서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주간보호센터나 직업훈련 재취업센터 기능을 발휘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차별화하기 어려움 바람직한 것은 발달장애인이 한 기관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보다는 일부 시간에는 교육도 받고, 또 일부 시간에는 여가도 즐기며,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직업훈련도 하다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낼 수도 있는 것이, 즉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이용자의 제한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관 중심의 운영이라는 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이 이동이나 장애의 특성으로 별도의 시설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기관과 교육과정이 있어서 자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앞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특

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과목(기본교육과정)만을 정하고,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기관의 역량,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때 기본교육과정은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적응 기술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며,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性)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성역할(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 2-3-7>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평생교육과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기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처럼 닫힌 체제로만 보지 말고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선택형 체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 외의 발달장애인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나 직업, 여가, 교양, 건강 등에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구성하도록 함 •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성인기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고 생각함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1)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구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인력 구성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비교적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 진술문의 예시처럼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은 크게 교육기관운동을 담당할 운영자,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리자(혹은 사례관리사),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할 교사와 교육보조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3-8>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구성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제공인력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어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사(일단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그리고 교사와 강사를 지원하는 교육보조원을 기본 인력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제공 인력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례관리자,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보조원... 이 네 가지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봄

2)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들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자격에 대하여 ‘교육관리자’, ‘기본교육교사’, ‘교육보조원’으로 나누어 각각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교육 교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훈련, 사회성 기술, 성교육 등을 포함하는 기본교육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교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참여자 모두는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현재 기본교육 교사로 가장 적절한 인력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이거나 일반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대다수가 개진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들이 향후 지정될 평생교육기관에 충분하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평생교육사 등도 기본교육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2-3-9> 기본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기본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른 평생교육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부분을 이루는 것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도할 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임. 현재 떠오르는 인력으로는 가장 먼저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사' 정도임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로서는 학부에서 충분한 장애관련 공부를 한 특수교사와 직업재활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함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상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수교사만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력이 여건 상 오지 않는다는 것임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특수교육 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되, 일반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 등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관리자

참여자들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교사 못지않게 개별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관리자(혹은 사례관리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양성되고 있는 평생교육사라 할지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정정도 있는 자로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사 등과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생교육 관리자를 해당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2-3-10> 교육 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교육관리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 못지않게 전체적인 기획이나 조정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이들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양성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두되, '특수교육 학개론'을 선택해 이수하였거나, 4주간의 실습을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을 우선 배치하도록 조건을 두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례관리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평생교육사로 두거나, 사회복지사로 두거나, 직업재활사로 두되 공히 발달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보조원

교육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양성되어 활동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기에 발달장애인 중 적합한 인력을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보조원으로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4절 시행방안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지정', '평생교육과정 구성',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방안

가.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대상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1)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제가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2) 동법 동조 제2호 제나목에 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동법 동조 제2호 제다목에 해당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이들 중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규모와 인적 구성을 갖춘 기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대상 구분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2])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의 제1항)	

다. 지정 기준(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정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요건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각과교육과정은 기관의 목적과 유형, 규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¹⁾. 단, 기본교육과 각과교육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구분과 내용은 본 절의 ‘교육과정의 구성(안)’을 참조할 것

- 기본교육과정: 3개 과목, 과목당 15차시(1차시 90분 기준)
- 각과교육과정: 1개 과목 이상, 과목당 15차시(1차시 90분 기준)

2) 교육제공인력 요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공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각 영역별 제공인력의 자격과 적절한 인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 일반요건

- 교육제공인력은 운영관리자, 교육관리자, 기본교육교사, 교육보조원을 두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기관의 경우 기관의 기존 운영관리자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관리자로, 교육관리자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 기본교육교사와 교육보조원은 반드시 따로 두어야 한다.

○ 교육관리자의 자격과 인원 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의 자격을 가진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교육관리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기본교육교사의 자격과 인원 등

- 기본교육교사(이하 '교사')의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육교사의 자격을 가졌거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로 할 수도 있다.

- 교사는 기본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대상 4명마다 1명을 두되,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 교사는 기본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교육과정에 맞게 교육을 수행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인원 등

- 교육보조원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교육보조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보조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보조원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강좌의 교사와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보조원의 인원은 교육관리자가 판단하여 정한다.
- 교육보조원은 교육관리자의 지휘를 받으며, 교사와 강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지원, 신변처리활동 지원 등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강사의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3) 시설, 설비 요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실 이상
-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양호실, 화장실, 학부모 대기실(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

라. 지정 절차

1) 지정 신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지정신청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지정을 신청·접수한다.

○ 지정신청서

－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인(대표자)의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연락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설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되, 제출서류에는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제공인력 정수표, 필요 경비 조달 계획서,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시설 평면도 및 시설 배치도, 지적도 및 위치도,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및 지정서 교부

교육감은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통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교육감은 서류 검토와 실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 방안

가. 관련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발달장

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 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나. 교육과정 구성(안)

1)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가) 기본교육과정

(1) 기본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기본교육과정이라 함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성된 과목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2) 기본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과 시수

기본교육과정은 세 과목으로 편성되며, 과목별 내용과 시수는 <표 2-4-2>와 같다. <표 2-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교육과정은 필수 이수 과정으로 세 과목으로 짜여 있으며, 각 과목은 차시 당 90분 총 15차시로 구성하여 기본교육과정은 주 3회 15주 강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안)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시수
기본 교육과정 (필수)	개인 생활	개인위생관리	- 몸의 청결과 유지, 계절과 장소에 맞는 옷 입기, 건강한 식사습관, 규칙적인 시간관리	15
		정리와 정돈	- 침구와 방안 정리, 청소, 세탁물 처리	
		위험에 대한 대처	- 위험상황 분별, 위험상황 예방, 위험상황 대처	
		성 인식	- 성에 대한 인식, 성에 맞는 행동, 이성에 대한 바른 인식	
	가정 생활	가족의 이해	- 집의 위치와 주소(전화번호) 알기, 가족의 구성과 성명 알기, 가족의 역할 알기, 가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알기	15
		가족 돕기와 요청	- 식사준비 돕기, 심부름하기, 화초·애완동물 돌보기, 분리수거 등	
		전화걸기와 받기	-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걸려온 전화 받기, 핸드폰의 기능 활용하기	
		친지와 가까운 이웃	- 친지와 가까운 이웃의 이해, 친지의 관계와 호칭, 인사예절과 관계, 관혼상제의 이해, 방문과 초대 예절	
		성 역할	- 나의 성에 따른 가족 내 성 역할 이해와 행동	
	지역 생활	지역사회의 특성	- 지역명, 도농구분, 특산물이나 명소 등 지역의 특성 이해	15
		주요 장소와 기능	- 주요 기관(학교, 관공서, 역이나 터미널, 공항 등)의 기능을 알고 찾아가기, 지역사회 랜드마크 알고 찾아가기	
		교통수단 사용	- 대중교통수단 이해와 이용하기	
		예절바른 대화	- 예의 바른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지역사회 이용	- 자주 이용하는 가게, 세탁소, 식당, 미용실, 목욕탕, 병원, 복지관 등의 위치를 알고 필요할 때 이용하기	
		소득과 지출	- 자신의 소득(용돈 등)을 관리하고 규모 있게 지출하기, 현금지출과 카드지출, 대중교통수단 지출	
		진로와 직업	- 일의 종류,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나에게 맞는 직업	
		성 예절	- 이성에 대한 바른 태도,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분명한 태도와 도움 요청	

자료: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39~44쪽 발췌 및 재구성.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222~236쪽 발췌 및 재구성.

나) 각과교육과정

(1) 각과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각과교육과정이라 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편성한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각과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과 시수

각과교육과정은 여섯 과목으로 편성되며, 과목별 내용과 시수는 <표 2-4-3>과 같다. <표 2-4-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과교육과정은 선택 이수 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기관의 실정에 따라 6개 과목(군)에서 교육 내용별로 과목을 정하여 선택 편성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차시 당 90분 총 15차시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안)

구분	과목	교육 내용	프로그램 정의	시수
각과 교육과정 (선택)	기초 문해 (군)	한글문해	- 발달장애 성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15 이상
		한글생활문해	-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 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 보완 (군)	초등학력보완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 능력 향상 (군)	기초직업교육	-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작업 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	
		전문직업교육	-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 이 직무 수행 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 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인증	-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문 교양 (군)	사회재활	-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교육 프로 그램	
		생활소양	-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 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 예술 (군)	여가 스포츠	-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 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	-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숙련	-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예술 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 참여 (군)	시민의식	-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역량	-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도록 지 원하는 프로그램	
		시민활동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 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자료: 김두영 외(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가)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에 대한 유의점

첫째, 교육과정에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둘째, 과목의 명칭은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기본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전담교사로 한다.

넷째, 각과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특성과 교수 방법 등을 숙지한 지역사회 종사자로 한다.

나) 기본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첫째, 기본교육과정에 정한 과목은 모두 지도하여야 하며, 내용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준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학기별 교육 시수는 과목당 15차시로 운영하며, 시간당 90분을 최소 단위로 한다.

셋째, 과목별 교육 자료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별도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 각과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6개 과목(군) 모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전체 개설 과목이나 기관의 규모, 교육과정 운영 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과목의 개설은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기별 교육 시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우선 개설한 과목(별도로 개설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당 90분을 최소 단위로 운영한다.

넷째, 같은 과목(군)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하위과목(예

를 들어, 직업능력향상-바리스타, 제과제빵, 애완동물 관리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강사에 대한 교육, 교육보조원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당 평생교육기관은 물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정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교육 방안

가. 관련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향후 시행세칙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제공인력의 요건과 관련하여 마련되어야 할 규정은 교육제공인력의 종류와 자격, 역할 등이다.

나. 교육제공인력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제공인력이라 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지정 기관의 운영 관리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대상을 선발하고 프로그램 강사진을 수급하는 등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 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기본교육교사, 교사와 강사의 교수활동 및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보조원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에 관련된 최소 인력을 가리킨다.

다. 교육제공인력의 역할과 자격 요건

1) 교육제공인력의 역할

교육제공인력의 역할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아래 <표 2-4-4>과 같다.

<표 2-4-4> 교육제공인력의 역할

구분	역할	비고
운영관리자	-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운영 관리자와 당해 기관의 교육 관리자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교육관리자	-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기획, 준비 및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 강사에 대한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기본교육교사	-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지도 - 교육 관리자에 대한 협력적 역할	
교육보조원	- 교육 관리자 및 기본교육 교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 지원	

2) 교육제공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제공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4-5>와 같다.

<표 2-4-5> 교육제공인력별 기관의 종류에 따른 자격 요건

교육제공 인력	기관의 종류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 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관리자	기관장 등	학원장 등	기관장 등	기관장 등	단체장 등
교육 관리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사	
기본교육 교사	특수교육교사,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자 (필요시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사,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자 (필요시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교육 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보조원 과정 연수 이수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보조인력				

라. 교육제공인력의 교육

1)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점

교육제공인력의 교육은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가)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직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운영관리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가 바뀔 경우에도 같다. 교육관리자와 특수교육 교사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기본교육교사는 임용 즉시 직무교

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나)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해당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방법 등을 교육하며, 연수, 우수기관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교육제공인력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1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기관과 교육 내용

가) 교육기관

교육제공인력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모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관할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련학회나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나) 주요과목과 시간

(1) 직무교육

직무교육의 주요과목과 시간은 교육제공인력에 따라 달리 정한다. 직무교육의 교과목과 시간은 <표 2-4-6>과 같이 정하되, 40시간으로 하며, 교육제공인력의 역할 요구에 따라 분야별 과목의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표 2-4-6> 교육제공인력별 직무교육 과목과 시간

대상	주요 과목		시간
	분야	과목	
운영관리자 교육관리자 기본교육교사	*평생교육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등	40시간
	**특수교육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전환교육론, 개별화교육계획, 정신지체아 교육론, 자폐성장애아 교육론, 장애아 가족 및 상담지원 등	
	*교육학 일반	교육사회학,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 설계 등	
교육보조원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을 준용함		30시간

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발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서 발췌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연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내용은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교육제공인력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위기발달장애인 - 쉼터 및 신고의무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국내외 현황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제4절 시행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필요성

최근 장애인의 권리, 선택, 자립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념적으로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모델과 관련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역시 재강조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권리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더 많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까지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김미옥, 201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장애인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영국도 정부주도로 학대예방을 위한 'No secret'보고서를 보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김미옥 외, 2015). 국내에서도 노인이나 아동분야에서는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대예방매뉴얼 개발 및 배포, 관련 서비스 기관에서의 후속 조치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장애인에 대한 학대,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로 인한 위기발달장애인의 일시보호 등이 가능한 장애인쉼터는 현재 4개소만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대 피해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재학대 및 피해의 중증화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예방과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의 기준 및 교육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학대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 및 시민권에 대한 폭력(Atherton & Crickmore, 2012)으로, 학자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No Secret’ 라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학대의 주요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금전적(혹은 물질적인) 학대, 무시와 배제 행위, 차별적 학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때리기, 치기, 밀기, 발차기, 약품의 오용, 제지, 부적절한 제재 등
- 성적 학대: 성폭행,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성적 행위 등
- 심리적 학대: 정서적인 학대, 위협, 접촉의 배제, 굴욕, 비난, 통제, 강제, 희롱, 언어적 학대, 서비스나 지원 네트워크의 배제나 소외 등
- 금전적 혹은 물질적 학대: 절도, 사기, 착취, 유언이나 자산 혹은 유산이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압력, 자산이나 소유물, 혜택의 오용이나 유용 등
- 무시와 배제행위: 의료적인 혹은 신체적인 돌봄 필요성의 무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사회적 돌봄 혹은 교육 서비스 제한, 의약품, 적절한 영양,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의 박탈 등
- 차별적 학대: 인종, 성, 인간의 무능력, 장애 등에 기초한 학대, 비방, 이와 유사한 형태의 취급

한편, 일본의 장애인학대방지법 제2조 7항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를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몸에 외상이 생길 수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
- 성적 학대: 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또는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
- 심리적 학대: 장애인에 대한 폭언, 거부적인 대응 또는 부당한 차별적 언행과 같이 장애인에게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 등
- 포기, 방치: 장애인의 식사제한(식사량 줄이기 등) 또는 장시간 방치,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 경제적 학대: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장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와 관련되어 합의된 학대정의 및 유형은 없으나, 김미옥(2014)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 및 물질적 학대, 방임과 유기, 차별적 학대로 구분하고 있다²⁾.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학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중 가장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학대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성적 학대는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 노출, 자위 행위, 성적 유희 등 가해자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이원숙, 2007).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consent)여부는 성적 학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지만 Brown과 Turk(1992)는 발달장애와 같이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 성적행위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임신 등)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언어적인 동의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탐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는 주먹질하기, 구타하기, 발로차기, 깨물기, 화상 입히기 혹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해침으로써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작게는 찰과상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나, 크게는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신체적 학대의 지표로는 멍자국, 열상, 골절, 화상, 뇌손상, 내장손상 등이 있다(Kirst-Ashman & Hull, 2002: 220). 아동학대분야에서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이원숙, 200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로서, 때리기, 세게 치기, 꼬집기, 물건 집어던지기, 흉기로 위협하기, 강하게 누르기, 강하게 붙잡기, 난폭하게 다루기,無理하게 먹이기, 신체를 구속하기, 감금하기, 의

2) 학대의 구분은 김미옥(2014)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음을 밝혀둔다

자나 침대에 묶어두기, 불필요한 약물투여하기,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히기 등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www. noinboho. org).

다.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혹은 심리적 학대로 명명된다. 심리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이다. 심리적 학대에는 가두기(처벌의 수단으로 묶어 놓거나 매어 놓기 등을 통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언어적·정서적 공격(습관적인 비하, 모욕, 희생양 만들기, 지나치게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처우 및 다른 형태의 학대 즉, 구차, 성폭행, 유기 등의 위협), 기타 알려지지 않은 학대(다른 형태의 학대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학대적 처우로서 음식, 주거, 수면 혹은 생필품의 제공을 의도적으로 유보하는 것 포함) 등이 있다(이원숙, 2007).

라. 재정적 및 물질적 학대(Financial & material abuse)

재정적 및 물질적 학대는 장애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학대는 소액의 현금을 훔치는 것,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것에서부터 좀 더 넓은 범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노인 학대 분야에서는 재정적 학대를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www. noinboho. org).

마. 방임과 유기(Neglect & acts of omission)

방임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독립적으로 획득·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 인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방임과 유기는 보호제공자가 의료, 영양, 거주, 교육, 지도감독, 애정 혹은 관심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적정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Kirst-Ashman & Hull, 2002: 221). 아동학대에서는 방임을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을 보호자

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유기를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이원숙, 2007). 노인 학대에서는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식사와 물을 주지 않기,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하기,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기), 청결 유지를 태만히 하기(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기,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하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등을 예시하고 있다(www.noinboho.org).

바. 차별적인 학대(Discriminatory abuse)

개인의 인종, 성(gender), 장애, 성적 취향,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 역시 학대로 볼 수 있다(Atherton & Crickmore, 2012: 201). 이 유형은 학문적으로 학대의 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영국의 ‘No secrets’에서는 이의 일종으로 시설 학대(institutional abuse)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빈약한 혹은 나쁜 돌봄(care)이 반복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더 심각한 문제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rown(2007)은 시설 학대가 학대의 유형은 아니지만, 빈약한 혹은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적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요소들에는 나쁜 환경, 엄격하고 억압적인 일상, 이용자의 욕구 및 요구 방임,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의 반응 등이 있다.

3.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및 운영 목적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긴급 지원으로 위기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학대가 위기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재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상황에 있는 위기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여(social inclusion)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발달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회복 지원
- 재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축
- 위기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일상적 삶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포함 증진

제2절 국내외 현황

1. 해외 사례³⁾

가. 영국

영국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학대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인권 취약 그룹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학대 방지 정책을 오래전부터 구현해 오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학대방지에 대한 정책적 지침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보건부에 의해 2000년에 발간된 ‘No Secret’와 2005년에 발행된 ‘Safeguarding Adults’이다.

1) No secrets

2000년 보건부에 의해 발간된 학대방지 지침서인 「No secrets」는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대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숨겨지거나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성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를

3) 국외사례는 김미옥 외(2015)의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강조하고 있다(이동석 외, 2014). 이 지침서는 학대에 관계가 있는 기관들의 공동 정책 및 절차 개발, 절차 실행에 관해 안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학대에 노출된 성인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학대에 노출된 성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및 각각의 관련 단체의 촘촘한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No secrets」의 주요한 목적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예방 전략이 실패했을 경우,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진료기관과 이를 규제하는 기관들, 사법기관,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인들과 대표 집단 등 민관을 막론한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침서가 길라잡이 형태를 취하는 것과 달리, 「No secrets」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계체계와 각 기관 및 단체에 알맞은 지침서를 만들되, 각 파트별로 어떤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할 뿐이다. 즉, 「No secrets」는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 No secrets 구성

섹션	내용
section 2	학대위험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정의
section 3	학대에 대응하는 기관 간 협력의 기준들
section 4	기관 간 협력정책 개발
section 5	전략의 구성요소들
section 6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대응절차
section 6	관계 주체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확산

2) Safeguarding Adults

「Safeguarding Adults」는 영국 보건부가 2000년에 「No secrets」라는 보고서를 발행한 후 이 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이 중심이 되어 학대예방과 구제를 위한 성인보호업무(adult protection

work)를 수행해 온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한 문서이다. 「No secrets」 발행 이후 9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성인보호업무를 위하여 책임공무원(leader officer)을 임명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이 일이 수행되었다. 여러 기관들 가운데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각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책임자들의 모임인 ADSS(Association of Directors of Social Services)에서 국가적인 틀(national framework)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학대에 관련된 좋은 실천들을 수집하고 이를 실천의 표준 형태로 제시하였다. 각 표준들은 전국에서 수집되었으며, 상당한 정보들은 PAVA(Practitioner Alliance against abuse of Vulnerable Adults)가 발행한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틀은 지방정부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지만, 이 내용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의 과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국가적 틀은 11개의 실천 표준으로 구성되었다.

<표 3-2-2> National Framework 실천 표준

표준	내용
Standard 1	각 지방정부는 ‘Safeguarding adults’ 업무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다기관으로 구성되는 파트너 십 조직을 설립한다.
Standard 2	Safeguarding adults’ 업무의 책임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이사회에 고지되어야 한다.
Standard 3	‘Safeguarding Adults’정책은 모든 사람은 학대와 방임이 없는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해야 하며, 지역 전략 파트너 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성인보호 파트너 십(Safeguarding Adults Partnership) 등의 구성조직과 구성원들은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Standard 4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각 기관내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민감하게 대응한다는(Zero-Tolerance) 정책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Standard 5	Safeguarding Adults 파트너십은 다기관의 인력개발, 소속 집단 훈련 등을 감독해야 한다. 파트너 십은 인력을 개발과 훈련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Standard 6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Safeguarding Adults’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tandard 7	각 지역에서는 다기관 ‘Safeguarding Adults’정책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내용에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안내가 제공될 수 있는 framework가 포함되어야 한다.
Standard 8	각 파트너 기관은 소속 지역 다기관 ‘Safeguarding Adults’정책과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의 내부 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부 규칙을 통해서 모든 종사자는 ‘Safeguarding Adults’정책과 절차내에서 일하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Standard 9	다기관 ‘Safeguarding Adults’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Alert, Referral, Decision, Safeguarding assessment strategy, Safeguarding assessment, Safeguarding plan, Review, Recording, Monitoring.
Standard 10	안전보호의 절차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해야 한다.
Standard 11	파트너십은 모든 업무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핵심 파트너로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Safeguarding Adults’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점검, 개발과 실행, 훈련전략, 개인단위의 안전보호 사정과 계획수립 및 실행 등의 과정에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나. 일본

1) 장애인학대방지법(障害者虐待防止法)

2012년 6월 20일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支援法)의 제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1일부터 ‘장애자학대방지, 장애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虐待の防止, 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장애자학대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자학대방지법(障害者虐待防止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복지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학대방지의 책무를 정해놓음으로서 장애인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보고의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과 감시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복지시설 안에서의 장애인 학대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심각한 장애인 학대는 학대 가해자인 직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조직 전체의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후생노동성 장애인복지부는 2015년 3월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학대예방과 대응 지침(障害者福祉施設等における障害者虐待の防止と対応の手引き)」을 제시하고 시설의 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학대방지법’ 제1조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장애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 방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장애인 권리 이익 옹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등 직원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되고 있다.

2) 관련제도 현황

장애인 학대방지, 조기대응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정촌,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역할과 관계자의 범위

별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2-3> 학대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분	네트워크 구성요소
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 주민, 민간학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적장애인상담원가족회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감시 네트워크
서비스사업소 등에 의한 학대발생 시 대응(개입)네트워크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학대사안 등에서 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와 상담지원사업자 등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을 해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전문기관의 개입 지원 네트워크	경찰, 변호사, 정신과를 포함한 의료 기관, 사회복지사, 권리옹호단체 등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료: [厚生労働省(2015) 「障害者福祉施設等における障害者虐待の防止と対応の手引き」]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및 직원에 의한 장애인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예측된다고 판단된 경우에 시정촌은 학대 받은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장애복지서비스의 이용(그룹홈 등의 단기입소, 시설입소 등)
- 부득이 한 사유에 따른 조치(장애인 복지시설에 단기입소, 시설입소 등)에 의해 보호자 등으로부터 분리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시정촌으로부터 시설에 긴급 입소를 요청하게 된다(장애인학대방지법 제10조). 이 과정에서 시정촌은 시정촌 장애인 학대방지센터(市町村障害者虐待防止センター)(장애인 학대방지법 제32조 관계)나 도도부현 장애인 권리옹호센터(都道府県障害者権利擁護センター)(장애인 학대방지법 제36조 관계)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학대방지센터와 권리옹호센터는 시정촌, 도도부현에 있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해당 시군구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기능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제2항에서 불가

피한 사유에 따른 조치에 의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재해 등(학대를 포함)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한 경우는 정원 초과에 따른 보수의 감산을 받지 않도록 이용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시설에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장애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단기, 시설입소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단기, 시설입소를 했을 때에는 장애인의 분리불안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국내현황

가. 관련 법률 현황

1) 장애인관련 법률 현황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전면 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9년 개정법 제8조에서 장애인 모욕 및 부당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1년 개정법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을 추가하였고, 2012년 개정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학대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학대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장애인학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정서적 학

대, 방임 및 유기,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등과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3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차별적인 학대와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 외에 세부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외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적 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을 했으며, 2008년 12월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협약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에 대한 의무, 성별, 연령, 장애를 고려한 학대 방지 조치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제공 등의 의무,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에 대한 의무,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의무, 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법률 마련의 의무 등 장애인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 현황

발달장애와 관련된 최근의 법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욕구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교육 실행 및 수사 시 신뢰관계인 참석 등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현장조사 규정,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 보호조치 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학대관련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복지법률에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면 위기발달장애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위기발달장애인은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를 말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현장조사에 대해 제16조에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격리하거나 보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복지법률 제 17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이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근직원이 시설당 최소 2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률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보조인, 제13조 수사기관 등 대상 발달장애인 보호 교육, 제 15조 유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접수)
-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제34조와 제41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를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계좌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애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복지법률 제17조, 제34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은 시도지사 등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혹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고의무에 대한 기준

발달장애인복지법률 제 15조에 의하면 발달장애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

-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제도 현황

1) 장애 및 유사 분야 쉼터 현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쉼터는 현재 4개소가 <표 3-2-4>과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다.

<표 3-2-4> 인권침해장애인쉼터 현황

구분	내용
법적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운영주체	시·도(위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예산액	개소당 9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인력구성	2명~3명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입소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욕구진단을 등을 통하여 심리치료 및 정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쉼터로 지정된 시설은 심리치료사, 간호인력 등을 추가 배치 - 시설 복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사후 관리 - 의료기관과 사전 협약 등을 체결하여 의료 연계체계 구축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3-2-5>와 같다. 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총 8명의 학대 피해자가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표 3-2-5>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지역별 설치 현황

시도	법인명	시설명	입소정원	종사자 수 (쉼터인력)	소재지
서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	15	8명(3명)	성북구
경기	기독교대한 감리교회	포천시 단기보호센터	10	4명(채용준비중)	포천시
전남	성골롬반 복지재단	명도복지관 단기보호센터	10	6명(2명)	목포시
경북	사) 경상북도 장애인재활협회	영주장애인 단기보호센터	10	8명(2명)	영주시

* 피해자 이용현황('15.4월말 기준) : 8명(서울 5명, 전남 1명, 경북 2명)

유사분야 쉼터로는 아동과 노인분야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으며, 이를 장애분야의 인권침해장애인쉼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6> 유사분야 쉼터 기준 비교

구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권침해장애인쉼터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운영주체	시·도(위탁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도(위탁 : 민간법인)	시·도(위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예산액	개소당 87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124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개소당 9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인력구성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2명~3명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 : 숙식 및 쉼터생활지원 / 보호기간 : 최대 4개월 -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원가정 복귀 : 학대재발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입소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욕구진단을 등을 통하여 심리치료 및 정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쉼터로 지정된 시설은 심리치료사, 간호인력 등을 추가 배치) - 시설 복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사후 관리 - 의료기관과 사전 협약 등을 체결하여 의료 연계체계 구축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현황	시도별 각 1개소 총 16개소 운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8월 현재 58개소가 선정되었으나, 37개소 운영중 * '14년도에는 심리치료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 (확충 목표) '15년도 57개소(58개소 중 1개소 자진 폐업) → '19년도 100개소 	시범사업: 4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장애인 8개소 운영중

노인 및 아동분야의 유사쉼터 현황을 보면 <표 3-2-7>와 같다. 학대피해노인쉼터 1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7개소 이주여성쉼터 25개소 청소년쉼터 109개소가 있다. 이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는 인권침해장애인쉼터 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개소 중 8개소가 있다.

<표 3-2-7> 유사 센터 현황

구분	개소수	예산(국비)	인력	담당부처(과)
학대피해노인센터	16개소	87백만원	4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학대피해아동센터	37개소	124백만원	4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0개소 (장애인8개소)	192백만원	4명~7명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이주여성센터	25개소	144백만원(11인이상) 114백만원(10인이하)	시설장 1명 상담원2~3명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청소년센터	109개소	평균 150백만원	4명~6명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인권피해장애인센터*	4개소	90백만원(국비50%)	2명~3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 * 2015년 시범운영 중

2) 장애 및 유사분야 학대 신고의무 현황

노인 및 아동 분야에서도 신고의무직군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의료인,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은 여기에 교사직군이 추가되어 있다. 장애인은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으로 구분되어 아동과 유사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8> 학대신고 의무현황

구분	노인학대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	발달장애인학대신고의무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61조의 제2항)	(아동복지법 제75조)	발달장애인복지법 제15조
신고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의무 직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 (신설 직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수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직군)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유치원의 교직원,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교직원,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 (의료인 직군)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그 종사자

3. 시사점

국내외 발달장애학대관련 현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No secret 등은 정부 주도로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보급하여, 민간기관들을 선도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역시 별도의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해서는 단일 기관으로는 부족하며,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대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의료적, 심리적, 사회복지적, 법률적 등 매우 다양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동분야에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위기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다. 현재 장애분야에 4개의 시범사업을 하는 쉼터가 있으나, 이용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스스로를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에 각 거점기관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위기발달장애인쉼터와 관련된 주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2명, 단기거주시설 2명, 장애관련단체 2명이었으며, 의견수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시 적절한 운영주체, 입소기간, 기능, 인력 등은 무엇인가?

둘째, 신고의무자는 적절한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주체 및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에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고, 인용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조식으로 표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익명성을 높이고자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조사 결과

가.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와 관련된 의견 수렴은 크게 운영주체, 입소기간, 기능 및 서비스, 인력 및 시설설비, 퇴소 및 사후보호 등 5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영주체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쉼터를 운영할 주체와 관련된 것이었다.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제1안)은 ‘단기거주시설’에 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안, (제2안)은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안, (제3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쉼터 설치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루 분포되고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표 3-3-1> 컴퓨터의 운영주체관련 의견

	주요 의견 내용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 • 컴퓨터가 공공서비스라면 인구에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함 •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골고루 컴퓨터가 마련되어 위기발달장애인을 적극 지원해야 함

제시된 3가지 방안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하는 안(제1안)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보호 제공 경험이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꼽힌 반면, 기존 이용자와의 문제, 공간적 한계 및 인력지원의 어려움 등이 우려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단기거주시설을 컴퓨터로 지정·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단기보호기능과 추가로 수행할 컴퓨터 기능 간에 명확한 역할구분 및 관계 정립이 우선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표 3-3-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안의 장단점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인프라 활용이 용이 • 일시보호제공 경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에 맞는 운영이 어려움 • 기존이용자와의 문제, 좁은 공간, 인력지원 등의 어려움 • 수시이용률의 문제, 운영비 부족 등 •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혼란유발 가능성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안(제2안)에 대해서는 기존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거주지원서비스 경험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시설이 중심이 될 경우 시설보호에 초점을 두는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표 3-3-3>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안의 장단점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활용 가능 • 초기세팅비용 절감 • 기존시설과 인력활용으로 가장 빠른 지원 가능 • 발굴 및 점검은 센터가 직접지원은 거주시설이 팀협력 시 장점 • 식사 및 거주서비스 지원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중심의 보호체제로 고착 위험/ 단순한 보호기능에 위험 • 피해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지원 구성에 한계 • 위기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지원의 어려워 쉼터기능은 어려움 • 조사권이 없어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 점 • 쉼터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움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안(제3안)은 위기발달장애인의 발굴 및 사후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 가능성이 큰 반면, 거주서비스 세팅에 따른 초기비용의 문제, 조사권과 감독권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직접 서비스 경험의 부재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표 3-3-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안(제3안)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발달장애인 발굴이 쉽고 정보접근성, 지원접근성 용이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책임성, 연속성, 법률 지원 용이 • 피해자에 대한 노출 최소화 • 피해자에 대한 상황 파악 용이 및 지원계획 수립에 효과적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용이, 쉼터 퇴소 후 사후보호조치에 영향력 발휘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비용 증가 • 감독의 객관성 확보 어려움/ 점검(조사)과 조사가 분리되지 않는 문제 • 피해자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에서의 어려움 • 쉼터 운영으로 센터 고유기능의 약화 우려 • 현재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불분명하고 직접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점

2) 입소기간

입소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명시된 최대 14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불가피할 경우 4개월 이내에 대한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다만, 입·퇴소 결정시 3개월이라는 일정 기간을 정하지 말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정과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표 3-3-5> 쉼터 입소기간 관련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쉼터 입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최대 14일은 발달장애인의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간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되, 최대 3개월은 넘지 않았으면 함 • 입소기간은 필요시 4개월 이상으로 하되, 위기발달장애인 개별상황에 맞게 입·퇴소 결정을 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쉼터이용자는 일정기간 심리적 안정과 전문치료를 요하므로 14일의 제한기간은 바람직하지 않음 • 쉼터의 입·퇴소 결정은 센터의 기능으로 해야 함. 즉, 개인별지원계획 및 지원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임 • 학대피해자는 심리적 문제와 주변의 갑작스러운 위협요인으로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외부요인의 위협성은 단기간에 제거되지 않음 •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4개월 이상도 허용 • 쉼터 입소자가 회복이 빠른 경우 3개월 내에 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개월 최대 4개월에 동의하나, 가능한 장기보다 단기로 시설보다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기능 뿐 아니라 심리치료, 법률지원서비스 장애진단 및 등록지원 등 관련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쉼터에서 지원하기는 인력 등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구축이 필요함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 3-3-6> 쉼터 제공 서비스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쉼터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서비스, 장애진단 및 등록 지원이 있어야 함 • 일시 및 단기보호 중심의 심리치료에 초점을 둔 쉼터와 중장기보호 중심의 생활환경지원에 초점을 둔 형태로 이원화 필요 • 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이를 통해 개별지원계획수립, 복지지원정보제공 및 연계 업무가 될 필요가 있음

4) 쉼터의 운영: 인력 및 시설설비 등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인력과 시설설비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첫째, 인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거주시설에 비해 인력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위기발달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1대1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인력으로는 상담 등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남녀성별 구성, 심리치료 전문인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의견으로는 바우처 이용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둘째, 시설설비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같은 설비여야 하며,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 경우 소규모 지향이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시설이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별 공간, 심리치료 등 치료 공간, 관련 장비들과 도구의 배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3-3-7> 쉽터 인력 및 시설 환경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 시설장 1인, 직원 3인으로 구성하여 3교대근무를 할 수 있어야 소진 및 잦은 이직 방지 위기발달장애인은 자해 및 타해 등 돌발위험행동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종사자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음 지역의 의료 및 심리지원이 가능한 기관들과 연계구축, 바우처 활용도 좋은 방안 쉽터 입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주시설보다 2배수 지원이 필요함 일정정도 종사자 인력 성비도 고려사항이며, 인력 중 심리치료 또는 행동치료 전공자도 채용이 되면 좋음 쉽터 내에 다양한 치료서비스 수행은 어려우므로 지역의 서비스 지원 가능한 기관들과 연계하고, 관련비용은 바우처, 정부지원, 시설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 인력중요, 사회복지나 상담 등 인력필요, 거주 및 생활지원 경험도 반드시 필요 인력배치는 시설규모에 따라 달라질 듯. 당분간은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임 심리(행동)치료 전문가인력 배치에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함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시설에 준하되 가급적 가정과 같은 환경 필요. 개별 공간, (심리)치료공간 확보 필요, 관련 장비들과 도구 배치 요함 일시보호는 긴장이 최고조이므로, 가능한 1대1의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함

5) 퇴소 후 사후관리

위기발달장애인이 재학대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쉽터 퇴소 후의 사후관리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퇴소 후 가능한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내의 주거지원 및 대안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체계적인 퇴소 후 사후관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3-3-8> 쉽터 퇴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후 인권침해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 사례관리 필요 취업, 결혼, 그룹홈, 체험홈, 자립지원방안, 원가정보호 등 다양한 지원형태 요함 사후관리는 쉽터가 아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여야 함 입양이나 일시 위탁가정 등도 고려

나. 유기 등 신고의무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발달장애인법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주체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신고의무자

발달장애인법 제15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직업군별로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이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학대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신고의무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신고의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2) 신고의무교육

신고의무 교육주체는 다양한 현실적인 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 직종이 매우 다양하여 가능한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되, 정부의 책임성이 중요한 만큼 공공성과 장애인권 민감성이 높은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년 설치·운영 될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 조례에 의한 인권센터 등이 신고의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신고의무교육은 다양한 직업군의 각종 보수교육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신고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특성, 유기 등 발달장애인대상 범죄현황, 발달장애인대상범죄(발달장애인지원법 14조, 시행령9조), 즉, 유기, 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성폭력등에 대한 개념설명, 처벌기준,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의무자를 위한 학대 예방 대책 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고의무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학대에 대한 내용과 상황을 지각할 수 있는 민감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 3-3-9> 신고의무교육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교육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 인권센터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장애인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센터’등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여기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법에 명시된 기관이 무척 다양해서 이를 한군데서 진행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임. 따라서 보수교육과정에 일부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특성, 발달장애인대상 범죄 및 학대 현황도 교육내용에 포함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유기, 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개념설명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함 처벌기준,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의무자를 위한 학대 예방 대책 등이 들어가야 함 신고의무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학대에 대한 내용과 상황을 지각할 수 있는 민감성 교육이 포함되면 좋겠음

제4절 시행방안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법과 하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와 ‘신고의무자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시행 방안

가. 법적 근거 및 주요 검토 사항

학대 등으로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17조(보호조치 등)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41조, 시행령(제10조)과 시행규칙(제5조)에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17조(보호조치 등)

-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41조(위임위탁)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상근인력이 시설 당 최소 2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주체’의 문제로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쉼터를 어디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으로써 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인력과 시설의 최소기준’으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구성과 환경의 조건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동법 내에서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하는데 있어 역할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에서 ‘쉼터’가 어떤 기능적 연계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입소기간 등과 같이 법률 규정에서 제시된 내용이 향후 보완될 점이 있는지를 함께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쉼터 위탁 운영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및 국내 사례 검토 결과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표 3-4-1>에 제시된 바와 3가지 위탁운영방안이 도출되었는데, 향후 쉼터의 운영 주체를 지정하는데 있는데 이들 방안들이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1> 운영주체별 쉼터 위탁 운영 방안과 주요 장단점

방안	주요 장단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제1안)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시보호 및 거주지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의 공간이나 인력구조로는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인력의 배치, 시설공간의 재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로 단기거주시설에 쉼터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제2안)	장애인거주시설 중 일부를 지정하여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거주지원서비스 경험이 일시 및 중장기보호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주시설에서 위탁·운영할 경우, 중장기보호서비스를 통해 시설입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를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운영할 경우는 불필요한 시설보호가 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쉼터 퇴소 후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제3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할 경우, 위기발달장애인을 발굴, 조사, 계획 수립에서 사후지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별 학대개입현황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게 함으로써 위기발달장애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도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원센터에 운영할 경우 쉼터를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점에서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직접서비스 경험 부재 등이 위험요소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쉼터가 추가될 경우,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3가지 방안 중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단기(제1안) 혹은 소규모 거주시설들(제2안) 중 일부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운영이라는 직접

서비스를 기능으로 추가할 경우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안과 제2안 중 한 가지 방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기거주시설이 일시보호의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운영에 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는 쉼터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단기거주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소규모 거주시설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주체가 어느 곳으로 지정되던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의 고려 속에서 연계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제3안의 경우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쉼터운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4-2>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본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방안

구분	운영방안	주요 고려 사항
단기적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기거주시설 및 소규모 거주시설에 거점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지역별 접근성 유지 • 신속한 쉼터 기능체계 가동 가능 • 거주 및 일상보호서비스에 대한 경험 활용해 초기 쉼터서비스 정착에 유리 • 별도시설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절감 효과 • 효과적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이 전제 • 거점기관 지정 시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거주시설의 경우 소규모시설을 전제로 함
중장기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지원체계 가동 가능 • 쉼터 시설 설치 등 초기비용 발생, 전문 인력 및 경험 축적이 필요함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안정화된 경우 센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쉼터를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다. 쉼터 입소 기간에 대한 검토 필요

발달장애인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위기발달장애인의 쉼터 입소기간은 7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 7일 이내에 입소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센터의 장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의 쉼터 이용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14일로 제한하는 짧은 입소기간은 사실상 쉼터의 기능을 일시 및 단기보호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위기발달장애인은 시설보호 혹은 원가정으로의 복귀 등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좀 더 긴 관찰과 치료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입소가능기간은 현재보다 늘어나야 하며, 이는 노인학대쉼터에 근거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4개월까지 입소 가능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개별 피해당사자마다 입소가능기간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소기간을 3개월 이내 최대 4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대부분이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

위의 입소기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발달장애인법에는 7일 이내 최대 14일 이내의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시 및 단기보호 서비스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쉼터의 기능을 <표3-2-11>과 같이 일시보호, 단기보호, 중장기보호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에 따라 그 대상과 기능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표 3-4-3> 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안)

기능	기간	주요 대상	주요기능 및 서비스	비고
일시 보호	3일 이내	학대 초기발견으로 응급 및 위기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 긴급 의료 및 상담 등 응급서비스 · 음식, 숙식제공 등의 일시보호서비스 · 단기 및 중장기 보호 여부 결정	추가기능
단기 보호	7일 이내 (최대 14일 이내)	응급상황에 일차적 대응을 한 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 지원 방향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중장기보호 및 향후 지원 계획 결정 · 심리 및 의료 등 집중치료서비스 지원 · 음식, 숙식제공 등의 보호서비스 · 사후관리방안 마련 및 지원: 중장기보호, 시설보호, 가정복귀 등	현재 발달장애인법에 명시
중장기 보호	3개월 이내 (최대 4개월 이내)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단기보호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사정이나 방향설정이 어려워 세심한 추가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한 복합 문제를 가진 발달장애인 · 시설보호 등으로 의뢰하지 않고 3개월 이내(최대 4개월 이내)쉼터서비스를 통하여 가정복귀 및 자립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발달장애인	· 집중적 치료(의료 및 심리, 상담)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 음식, 숙식제공 등의 보호서비스 · 사후관리방안 마련 및 지원: 시설보호, 가정복귀, 지역사회 자립, 취업, 결혼, 위탁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지도 모색	추가기능

이러한 기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에서 모두 가지고 있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기능 및 역할이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인력과 시설 환경

노인이나 아동 등 유사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3인을 최소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정도 및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인력지원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자 4.7명당 1명의 기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의 경우 2배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쉼터에 입소하는 위기발달장애인은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긴장상황 및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대일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지원의 범위가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쉼터 인력은 최소한 시설장, 사회복지사 2인으로 구성하되, 쉼터입소 후 적절한 의료 및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구축이 필요하며, 심리치료 등은 심리치료 바우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설비는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준하되, 소규모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기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개별공간제공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바. 쉼터의 운영체계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구조이다. 이에 전체적인 운영체계가 <그림 3->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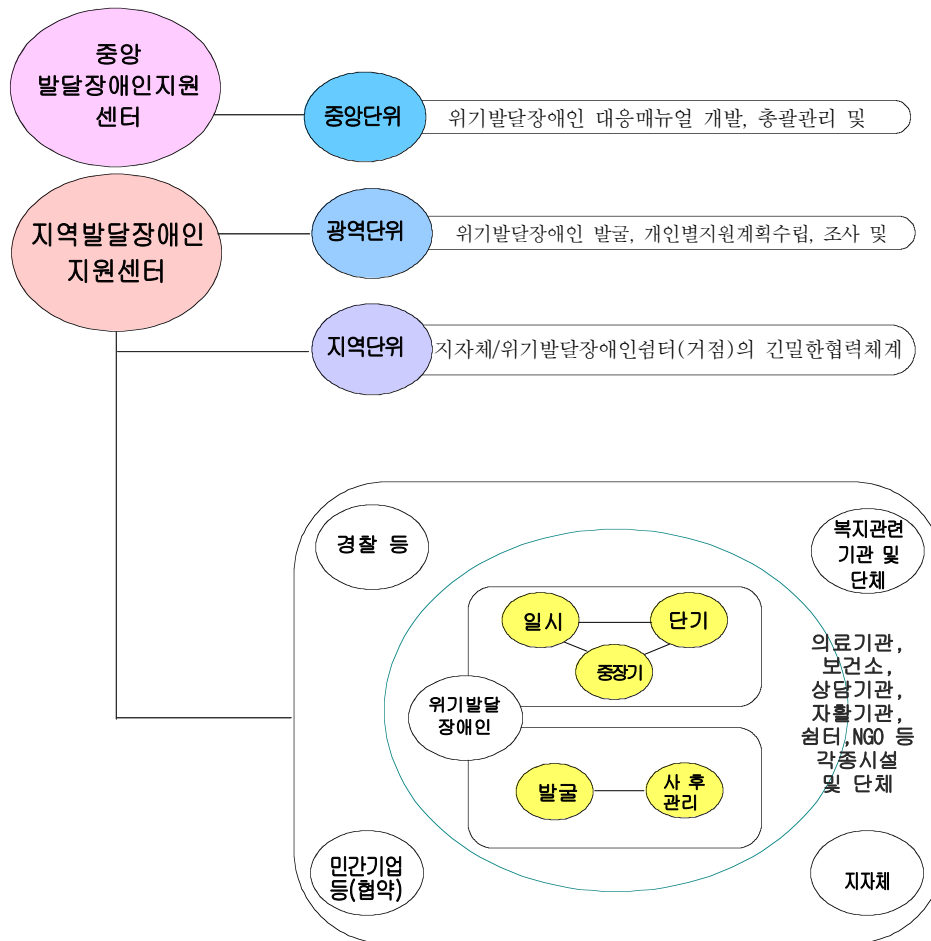
우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총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지속적인 통계자료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발달장애인관련 현황 파악과 위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중앙센터는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개발과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매뉴얼에는 조사권의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의 내용과 위기 구분, 점검과 관련된 쉼터 서비스 평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단위의 발달장애인센터에 보급하며, 쉼터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발달장애인센터는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기발달장애인쉼터와 긴밀한 연계구축을 통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에서 위기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함으로써 위기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기발달장애인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쉼터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계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서비스 구성, 즉 일시보호, 단기보호, 중장기보호의 서비스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발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선명한 운영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관련복지단체,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1]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운영체계



사. 퇴소 후 사후관리

발달장애인법 제 17조에 의하면 쉼터에서 퇴소 후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위기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시설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정도나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이외에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보호조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쉼터와 긴밀한 협력 구조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신고의무교육 시행 방안

가. 법적 근거 및 주요 검토 사항

발달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발달장애인법률 제15조(신고의무)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교육의 내용과 실시 방법들을 시행규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신고의무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할 주체, 교육 내용과 실시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교육주체

신고의무교육은 공공성을 띄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장애인관련기관의 인권교육 등에 학대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의 교사교육을 활용하는 방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도로 신고의무교육이 필요한 해당지역에 교육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 및 방법을 통해서 위기발달장애인 신고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위기발달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위기발달장애인 발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교육내용

신고의무교육의 내용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재 법에 명시된 최소 1시간이상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학대민감성에 대한 교육, 실질적으로 위기발달장애인을 발견했을 때 초기대응이 가능한 기본정보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각 교육주체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간 배정은 법에 명시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각 20분씩으로 구분 가능하다. 다만, 발달장애의 이해 정도에 따라 시간 배정을 상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주체의 특성에 따라 1시간 이상이 가능하다면, 각 교육주체를 최소 30분 이상씩 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4> 신고의무교육내용(안)

교육주제	세부 내용 구성	최소시간 배정
발달장애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발달장애의 정의, 특성 등	20분~30분
학대민감성	학대의 개념 및 위기발달장애인의 초기 반응 등	20분~30분
위기발달장애인 발견시 초기대응에 대한 정보교육	신고의무법령, 신고기관,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20분~30분

라. 교육시간

신고의무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된 현재의 법을 2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혹은 최소 1시간 이상이므로 2시간~3시간 정도의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1시간이라는 최소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실효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4 장

성년후견법인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국내외 현황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제4절 시행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필요성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제도)가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적 입법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기결정권 보장’, ‘정상화 이념’ 등을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의사와 현존(잔존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복천, 2014).

한편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공공후견지원사업’을 2013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양성된 공공후견인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지원은 2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고, 후견심판 청구 업무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피후견인에 대한 발굴,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지원, 후견인 관리 등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견법인을 통한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후견인 교육 및 양성, 후견심판 청구 등 제반으로 공공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법인후견은 현재까지 행해져 오고 있는 개인후견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피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후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후견업무는 몇 년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이 후견업무를 담당했을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망 등에 의해 후견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개인후견의 경우에는 여행이나 출장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피후견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후견법인의 경우에는 동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법인 소속의 다른 담당자가 후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사무의 대상지가 광범위한 사안이나 장기적인 사안, 특별한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후견법인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담당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개념 및 정의

국내의 경우 후견법인에 대한 법률적 혹은 공식화된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후견법인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930조 제3항에서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을 뿐, 후견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으며, 후견법인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이다.⁴⁾ 따라서 민법 관련 규정에만 의거한다면 법인의 유형과 관련 없이(즉, 사단법인, 재단법인, 복지법인, 영리법인 등을 모두 포괄) 기존의 모든 법인들 중에서 후견서비스 제공을 법인 사업 중의 하나로 정관에 포함할 경우 후견법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 후견이 아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사업의 수행

4) 후견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이 특정 사건에서 법인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가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단법인 온음(법무법인 율촌의 공익활동 지원법인) 등을 전문후견감독법인으로 선정한 바도 있다.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즉,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법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후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볼 때 지정된 후견법인(저소득)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후견인 후보자 추천, 후견인 후보자 중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지원 및 감독, 후견심판 청구 등의 제반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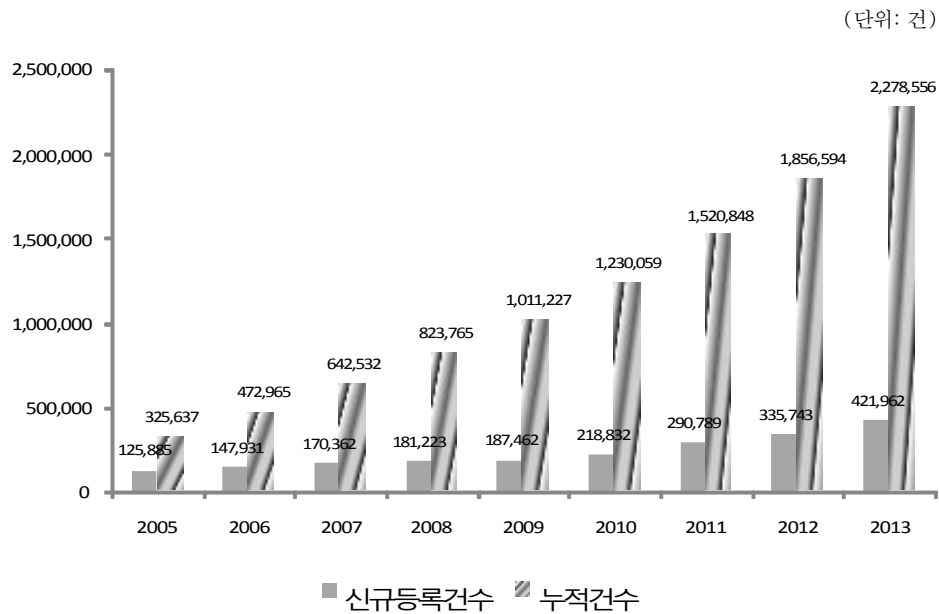
1. 해외 사례

가. 독일

1) 후견 현황

독일은 법정 후견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에 유사한 지속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장래대리권(Vorsorgevollmacht)’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래대리권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만이 아니라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연방공증위원회의 ‘장래대리권 중앙등록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장래대리권의 활용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그림 4-2-1]과 같다. 해마다 신규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3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42만 건의 장래대리권이 신규 등록되었으며, 총 누적 건수는 약 280여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독일의 장래대리권 등록건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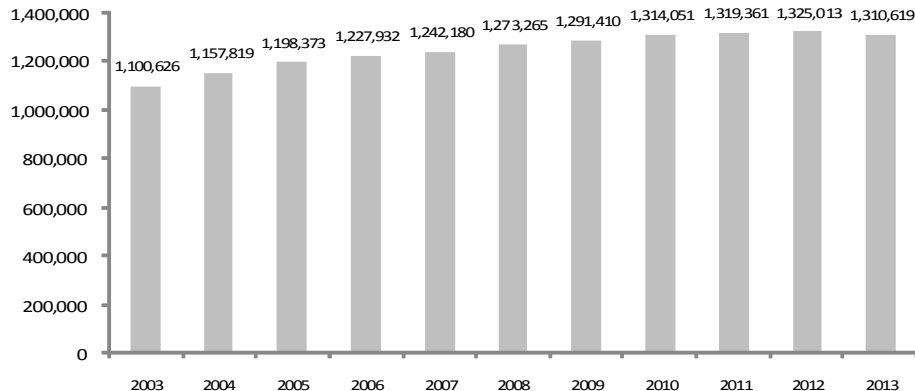


자료: 연방 공증위원회 중앙 장래대리권등록소 자료

반면, 법적후견 건수는 아래 [그림 4-2-2]에서 알 수 있듯이 장래대리권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03년 약 111만 건에 다다랐던 법적 후견 누적 건수는 1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총 누적 건수가 약 130만 건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적후견 대신 장래대리권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2] 독일의 법적 후견 누적건수 연도별 추이

(단위: 건)



자료: 연방법무부 사법통계((Justizstatistik) 구법원(Amtgericht) Gü 2 2002-2013

2) 유형별 후견 현황

독일의 경우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가족, 시민후견인, 직업적 후견인, 후견법인, 성년후견관청이 있다(독일 민법 제1897조, 제1900조). 이 중 가족과 시민후견인⁵⁾은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후견인(Ehrenamtlicher Betreuer)’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직업적 후견인은 크게 ‘자영 직업후견인’과 ‘후견법인 소속의 직업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며, 직업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군을 보면 사회복지지도원, 사회교육가, 변호사, 세무사 등이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보수지급 기준을 법률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⁶⁾

한편, 후견법인은 독일 민법 제1908조의예에 의해 주(Länder)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하며, 성년후견관청은 성년후견사건의 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의미한

5) 시민후견인은 친족이외의 사람으로 무보수로 후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행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으나 국가로부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1건당 연간 323유로(환율 1,400원일 경우 연간 약 452,000원)를 실비변상조로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6) 현재 10명을 초과하는 후견사건(성인 및 미성년 후견 포함, 보좌 포함)을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최소한 10명 이상에 대해 후견을 맡을 것이라는 사실을 후견법원이 확인해 주면 직업적 후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주당 20시간이상을 후견사건에 투입하는 경우에도 직업적 후견인으로 인정된다(독일 민법 제1836조, 후견인보수법 제1조, 제4조 등 참조).

다. 1명 또는 다수의 자연인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피후견인을 충분히 후견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견법원은 인가받은 후견법인이나 성년후견관청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후견법인과 성년후견관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실제 후견업무는 후견법인의 직원 또는 성년후견관청의 공무원에게 위임되고 그 사실을 후견법원에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독일 민법 제1900조).

후견인 선정은 피후견인의 의사로 지정해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에 따라 일차적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특별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 적당한 사람, 그 다음으로 친족 아닌 시민후견인, 직업적 후견인(그 중 후견법인의 직원은 후견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성년후견관청직원후견인, 후견법인, 성년후견관청 등의 순서로 후견인이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897조, 제1900조).

유형별로 독일의 후견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4-2-1>과 같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체 후견인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6%로 가장 높고 직업적 후견인이 약 34.2%, 후견법인이 약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부터 2013년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족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에, 직업후견은 20.1%에서 34.2%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견법인 역시 1997년에 비하여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두고 후견법인의 차지하는 역할이 감소하였다고 성급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직업적 후견인들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 후견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후견법인 소속 직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직업후견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4-2-1> 유형별 후견인의 현황

(단위: %)

구분	가족후견인	시민후견인	직업후견인	후견법인	성년후견관청후견
1999년	61.33	9.00	20.12	7.28	2.27
2003년	63.98	6.51	22.59	6.01	0.91
2006년	61.88	5.83	26.08	5.68	0.53
2009년	59.49	5.49	28.81	5.79	0.42
2013년	53.59	5.47	34.21	6.37	0.25

자료: 연방 법무성 사법통계

3) 후견법인의 서비스 제공 현황

독일의 경우 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개인 혹은 다수의 자연(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후견법인 자체가 그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견법인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업적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후견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는 후견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법인 소속 직원에 제공되는 경우를 모두 합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견법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후견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법적후견의 총 누적 건수는 1,310,612이었으며([그림 4-2-2] 참조), 이중에서 후견법인 자체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전체 건수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표4-2-1> 참조), 후견법인 자체가 제공하는 후견서비스는 총 83,486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총 868개의 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에 근거하여 보면 후견법인 1개 당 평균 96건에 대한 후견서비스를 후견법인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직접적으로 집계한 통계치는 없다. 다만, 2009년도에 Köhl/Engels⁷⁾의 조사에 따르면, 후견법인 1개소 당 평균적으로 4명의 직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며, 직원 1인이 제공하는 후견서비스는 평균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견법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후견서비스의 규모는 후견법인 1개소 당 약 200여건(법인 자체 담당 96건 + 후견법원 소속 직원 담당 100여건)에 다다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직업적 후견인 보수액이 피후견인 1인당 약 200만원, 후견법인 자체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도 직업적 후견인에 준하는 보수액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후견법인 1개소 당 후견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수입은 연 평균 4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7) Köhl/Engels(2009), Rechtliche Betreuung in Deutschland, Bundesanzeiger.

4)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과 법인후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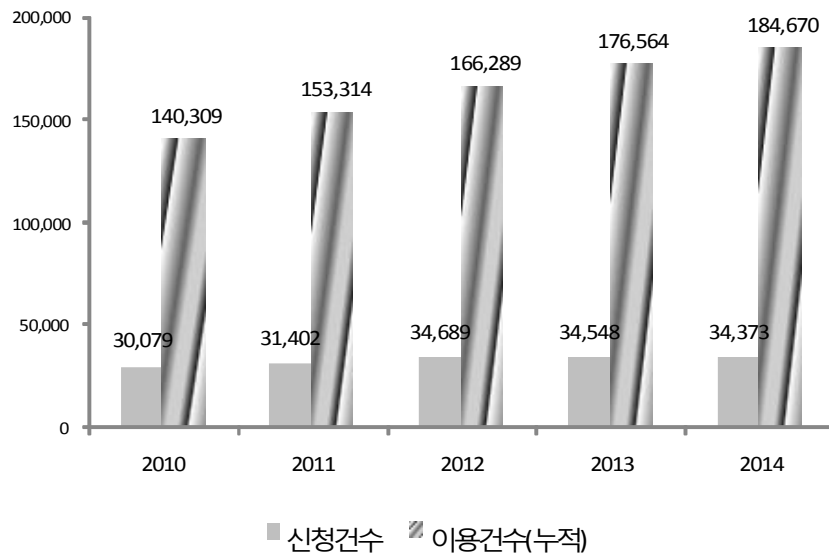
독일의 경우 정부에 의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크게 후견 관련 인프라 확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후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시민후견인과 친족후견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시민후견인의 모집과 양성, 장래 대리권의 활용에 대한 홍보와 자문 등의 후견관련 업무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후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Zimmermann(200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20만 유로가 시민 후견인 교육 등의 인프라 확대사업에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을 수행한 후견법인 1개소 당 1년에 10,600유로(약 1,480만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후견들을 위해서 이들의 후견인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피후견인 1인당 직업후견인에 대한 보수로 연간 약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일본

1) 후견 현황

일본은 2000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성년후견 신청 및 이용은 매년 증가하여 왔다.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초기인 2000년의 9,007건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총 이용건수가 140,309건으로, 2014년에는 184,670건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아도 매년 3만 건 이상의 신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폭이나마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3] 일본의 후견이용 연도별 현황



자료: 최고재판소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10~2014년 자료 재정리

2) 유형별 후견 현황

일본의 성년후견인은 크게 친족후견인과 제3자 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다. 친족후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이 해당되며, 제3자 후견인은 법인,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선임된 후견인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4-2-2>와 같다. 전체 후견인 중에서 친족 후견인인 ‘자녀’가 22.7%로 가장 많고, 제3자 후견인에 속하는 사법서사가 21.8%, 변호사가 17.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견인 중 친족 후견인이 전체의 약 42%(14,064명), 제3자 후견인이 약 58%(19,379명)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가족 외의 후견인 활용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자 후견인 중 법인후견과 시민후견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후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기타법인이 각각 560명(1.67%)과 959명(2.87%)으로 전체 성년후견인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후견인은 1.2%로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후견추진사업이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2012년 최근에서야 도입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표 4-2-2> 일본의 성년후견인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후견인의 수	합계
친족 후견인	배우자	1,181(3.53%)	14,064 (42.05%)
	부모	957(2.86%)	
	자녀	7,594(22.71%)	
	형제	2,031(6.07%)	
	기타친족	2,301(6.88%)	
제 3자 후견인	사회복지협의회	560(1.67%)	19,379 (57.95%)
	기타법인	959(2.87%)	
	사법서사	7,295(21.81%)	
	변호사	5,870(17.55%)	
	사회복지사	3,332(9.96%)	
	세무사	81(0.24%)	
	행정서사	864(2.58%)	
	정신보건복지사	22(0.07%)	
	시민 및 기타	396(1.18%)	
합계			33,443

자료: 일본 최고재판소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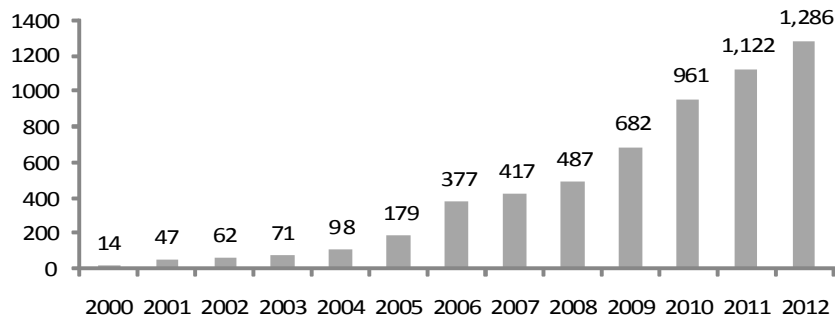
3) 후견법인의 서비스 제공현황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후견법인의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나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각 개별 후견심판 청구 사건에서 피후견인과의 관계, 법인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후견인으로서 적격하다고 선임되면 법인후견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법인후견의 후견선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당시 14건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2년에는 2,286건으로 약 92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을 전후하여 법인후견의 후견선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6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법인후견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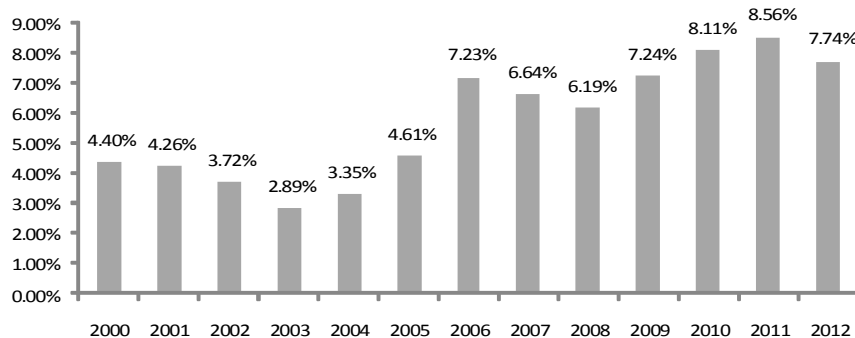
[그림 4-2-4] 법인후견 후견선임 연도별 추이



자료: 특정비영리법인PAS네트, 法人後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보고서(2014년)

이에 따라 제3자 후견 중에서 법인후견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아래 [그림 4-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 이전에는 약 3~4% 정도에 머무르던 것에서 최근에는 약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제3자 후견인에서 법인후견이 점하는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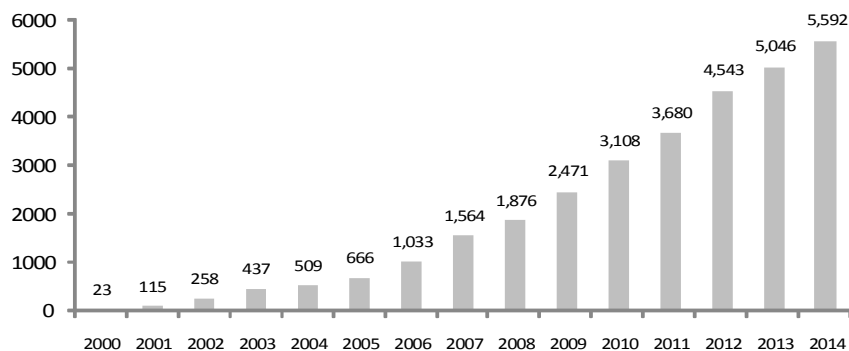
자료: 특정비영리법인PAS네트, 法人後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보고서(2014년), 최고재판소가정국, 성년후견사건의 개황에서 재정리

4)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과 후견법인

일본은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2001년에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200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성년후견이용지원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심판 청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 친척이 후견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 대상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후견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4-2-6]와 같은데, 2000년 당시 23건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 현재 5,04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선임된 후견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피후견인이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월 28,000엔, 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 18,000엔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림 4-2-6] 지방자치단체 후견심판 청구 건수



자료: 최고재판소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00~2014년 자료 재정리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시민후견추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⁸⁾ 시민후견인 후보자 교육과 양성된 시민후견후보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인데, 대부분 후견법인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후견법인에 의한 후견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제도 법인후견지원사업’을 통해 후견법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법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가. 후견현황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3,419건의 후견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약 67%인 2,299건이 인용되어 후견인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후견신청 처리 현황(2013.7.1~2015.4.30)

(단위: 건)

구분	인용(일부인용 포함)	기각 등 (각하, 취하, 기타 포함)	합계
사례수	2,299	1,120	3,419

선임된 후견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년후견인이 1,613명으로 전체의 약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358명(16.5%), 한정후견인은 192명(8.9%), 임의후견인은 3명으로 나타났다.

8) 2012년에만 8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민후견추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후생노동성)는 2.1억엔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표 4-2-4> 유형별 후견인 현황(2013.7.1~2015.4.30)

(단위: 건, %)

구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합계
사례수	1,613(74.5%)	192(8.9%)	358(16.5%)	3(0.01%)	2,166

한편 피후견인과 후견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이 전체 후견인 중 약 85%(1,8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가 그룹은 3.5%(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 유형(2013.7.1~2015.4.30)

(단위: 건, %)

구분	친족	전문가	기타	합계
사례수	1,839(84.9%)	75(3.5%)	252(11.6%)	2,166

나. 공공후견사업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9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크게 후견심판청구지원과 공공후견인활동지원으로 나뉜다. 후견심판 청구지원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이며⁹⁾ 실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은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과 공공후견인후보자가 거주시설 내에서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후견 판결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까지 총 226건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강원(29건), 광주(25건), 부산(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또는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표 4-2-6> 지역별 공공후견 판결 현황(15.5. 현재)

(단위: 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총계
66	7	17	1	2	25	30	29	11	7	10	10	2	6	3	226

주: 친족후견 판결 건수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공공후견 청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정후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64건이 모두 특정후견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부의 공공후견사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후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7> 유형별 공공후견지원사업 청구 실적(13.9.1~15.6.30)

(단위: 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합계
청구건수	—	1	364	—	36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한편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은 현재 2개 컨소시엄(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을 지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약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총 1,59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실적(13.7.1~14.11.30)

(단위: 명)

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 컨소시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컨소시엄	합계
인원	755	836	1,591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후견법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성년후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의 실무책임자 3명, 관련 법률 전문가 2명이었으며, 의견수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견법인의 주요 역할과 그에 따른 지정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후견법인의 직원이 보유하여야 할 자질과 담당업무 건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견법인 직원과 시민후견인후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후견법인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사 결과

가. 후견법인의 역할 및 지정 요건

1) 후견법인의 역할

후견법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는 크게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인후보자 교육, 발굴 및 홍보 등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후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인 자체가 후견감독의 업무도 향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 교육

과 양성에 있어서도 후견법인이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홍보 및 후견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후견법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4-3-1> 후견법인의 역할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후견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후보자 추천, 후견신청 준비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후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에서 전문후견감독법인을 선정한 것처럼 후견법인이 향후 후견감독의 업무를 맡아서 행할 필요가 있음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후견인 양성 교육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후견법인이 후견인후보자 교육을 담당하고 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후견법인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발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써야 함 •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함

2) 후견법인의 지정

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법의 시행과 더불어 처음 모색되는 것이기에 후견법인 지정 조건 및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먼저 후견법인의 지정조건과 관련해서는 후견법인의 목적과 가치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 즉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성년후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성,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사업 초창기인 만큼 다양한 법인들이 후견법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정절차에 관해서는 공모사업 형태를 취하되 후견법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느 정도의 후견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 공공후견서비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후견법인만을 지정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다들 공감을 표하였다.

<표 4-3-2>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초창기인 만큼 후견법인의 다양성이나 자율성,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함 •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 •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법인이 선정되는 것이 필요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 주기적인 재심사 과정을 두어야 할 것임
후견법인의 적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공공후견 신청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후견법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최소한의 후견법인만을 지정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 발달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광역시도별로 혹은 권역별로 1~2개 정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나. 후견법인 직원

1) 직원의 자질

후견법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였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 행정처리 능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후견서비스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무성, 성실성도 중요한 자질로 언급되었으며, 피후견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관계 형성 기술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표 4-3-3> 후견법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의견들

	주요 의견 내용
직원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 •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 지식 및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피후견인에 대한 지원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함 • 도덕성, 책무성, 성실성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담당 업무량

후견법인의 직원이 어느 정도의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서비스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명당 5건 이상의 후견업무를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직원 한 명당 20건 정도의 후견서비스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높은 업무량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3) 후견인후보자의 활용

후견법인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후견법인에 의해 양성된 후견인후보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지정된 후견법인의 수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상시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후견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법인 소속 직원이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관할 지역 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그 곳에 거주하는 공공후견인후보자로 하여금 정보수집 및 일상 지원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후견법인의 직원은 일종의 공공후견인후보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후견법인의 직원이 보다 많은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 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

후견법인이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후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때, 후견법인과 현재 공공후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향후 광역시도에 설치될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의 관계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

지는 주된 논의 사항이었다. 참여자들은 아래 표<3-4-4>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후견사업의 업무 수행, 운영 절차, 관리감독 등에 있어 이들 기관 간에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지침 제공과 더불어 후견법인을 포함한 후견인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별 사건마다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후견법인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을 교육, 양성하고 실질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후견법인에 의한 후견신청,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수행하고, 지역자원을 조직하고 연계함으로써 후견법인이 후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 4-3-4>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의견들

구분	기관별 주요 역할에 대한 의견 내용
중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서비스 활용목표 및 방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함 • 후견서비스 제공 매뉴얼, 후견제도 활용목표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후견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합적 관리, 그 일환으로 후견서비스제공자(후견법인)의 선정과 관리, 감독업무가 요구됨 • 후견인(후견법인 포함)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감독함
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상담을 제공함 • 지역사회 내 후견서비스 제공자를 조직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함 • 지역 단위 공무원, 각종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후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후견서비스를 제공함 • 공공후견인을 모집하고 양성함 • 공공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으로서 이들이 제공하는 후견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감독함

제4절 시행방안

1. 법적 근거 및 주요 검토 사항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을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후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 후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제3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후견심판 청구, 후견인 교육, 후견인 감독 등 제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국가적 책무성을 시행규칙(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후견법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후견법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시행하는데 있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행령에서 후견법인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후견법인의 지정요건, 지정 규모, 지원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견법인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수행체계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과 의 관계 및 역할을 재조정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고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후견법인 지정 방안

가. 후견법인 지정요건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견법인을 지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견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최소한의 지정 요건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고려 사항

현재 후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견법인의 기본적인 자격은 기존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중 후견서비스 제공을 주된 법인의 사업내용으로 정관에 포함시키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 명

시하고 있는 후견법인의 지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공공후견사업의 수행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후견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후견사업이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업무와 신상보호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후견법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의 재산은 이들의 일상생활, 치료, 요양 등의 신상보호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2) 지정 요건

후견법인의 사업 경험, 법인의 규모, 재정상태, 종사자 수 및 자격 등과 같은 정량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후견법인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후견법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사업의 본래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성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지향성을 충실히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량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평가보다는 정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후견법인을 심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지향성

성년후견제도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및 관련 수행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후견업무 전문성

후견법인은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후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법률전문직의

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법인의 공익성과 공공후견사업 충실성

후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하며(정관 명시), 특히 공공후견사업의 수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의뢰하는 공공후견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후견사업 대상이 아닌 후견서비스는 공공후견사업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는 실비변상 이외의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한다.

라)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역량

후견법인은 후견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가의 협조 하에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지역 내 지원 네트워크 형성

후견법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후견법인 직원은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후견법인 지정 규모

후견법인 지정요건과 더불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어느 정도의 후견법인을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공후견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이용 실적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 표<4-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시도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묶어 추진하고, 향후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임 건수 등의 변화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4-1> 적정 규모의 후견지정 방안

구분	내용
기본지정	서울 2개 법인, 인천, 경기권 2개 법인, 충청권(대전 포함) 1개 법인, 영남(대구, 부산 포함) 1개 법인, 호남(광주 포함) 1개법인 등 총 7개 후견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
추가지정	향후 후견신청 또는 후견서비스제공이 50건 이상, 후견감독 건수가 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1개의 단위로 설정하여 추가로 후견법인을 지정

다. 후견법인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

1) 신청

후견법인 지정은 공모사업 형태를 가지며, 후견법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후견법인임을 증명하는 법인등록증, 채용된 직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협약 등이 체결된 지원기관과의 협약서,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
- 사업 운영 목표, 운영 계획 및 방안, 후견서비스 제공 및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제안서(관할 지역 표시)
- 서약서 (지도·감독에 대한 승인, 시정명령 및 기타 행정적 지도에 대한 동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점에 대한 서약 등)

2) 심사와 지정

공모에 응한 후견법인의 심사에는 먼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충실히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고, 심사기준인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지정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하되, 매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는 사업성과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포함하도록 하며 2년차까지 목표 대비 사업성고가 미비할 경우 3년 차에는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3년간의 후견법인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하도록 한다.

3. 후견법인 운영 방안

가. 후견법인의 주요 역할과 기능

1) 후견신청사무

후견법인이 지정될 경우 후견신청사무는 후견법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법인의 직원 또는 또는 후견법인이 조직한 지역 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후견 개시 및 후견 관련 심판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후견법인에 소속된 담당 직원은 후견인으로 직접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법인은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맡게 되므로 별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또한 후견법인은 교육을 통해 양성된 후견인후보자를 추천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공공후견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친족이 후견인이 된 경우에도 후견법인은 후견감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후견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3) 후견인후보자의 교육 및 양성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해 왔으나, 후견법인이 지정될 경우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의 후견법인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견인후보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교육에 준하여 최소 30시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후견법인의 담당직원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거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홍보활동

후견법인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 공공후견사업의 내용을 널리 알려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꾀하여 한다.

나. 후견법인에 대한 지원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후견법인은 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하여 후견신청사무, 직접적인 후견서비스뿐 만 아니라 후견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후견인후보자의 교육, 후견인의 지원 및 관리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후견법인이 직원 인건비, 사업비, 홍보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래 표 <4-4-2>는 후견법인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량을 현행 공공후견사업의 기준에 준하여 예산지원 내용을 산출해 본 것인데, 후견법인 1인 당 약 1억원의 경상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예측된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후견법인을 지원하는데 있어 아래 제시된 업무량을 기본으로 제시하되, 후견서비스 제공 및 후견심판 청구 등의 업무를 최저 20건 이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 업무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공공후견사업의 예산지원 기준에 맞추어 후견법인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사업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후견서비스 제공: 50건×10만원×12개월=6,000만원
-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20건×5만원×12개월=1,200만원
-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양성: 1,500만원
- 후견심판 청구: 연간 50건×30만원=1,500만원

다. 공공후견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1) 추진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정립

후견법인이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후견업무를 담당할 하나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역할이 어느 정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 및 감독서비스 제공,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 감독을 등 공공후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후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 관련 제반 사무업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 추진주체별로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4-2> 공공후견사업 추진주체별 역할과 기능

추진주체		주요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 후견법인 지정 및 관리 감독 • 후견법인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신청권을 행사하되 공공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후견법인에 위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 개선 • 후견서비스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 • 후견법인 직원연수교육 실시 • 후견법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내 후견법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 • 후견법인 활동 중앙센터 보고 • 후견인 후보자 추천 • 후견신청 서류 준비 지원 및 자문 •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후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서비스,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 후견인 교육 및 양성 • 공공후견인 지원 및 감독 • 후견사무지원 • 후견인후보자 추천 • 지원대상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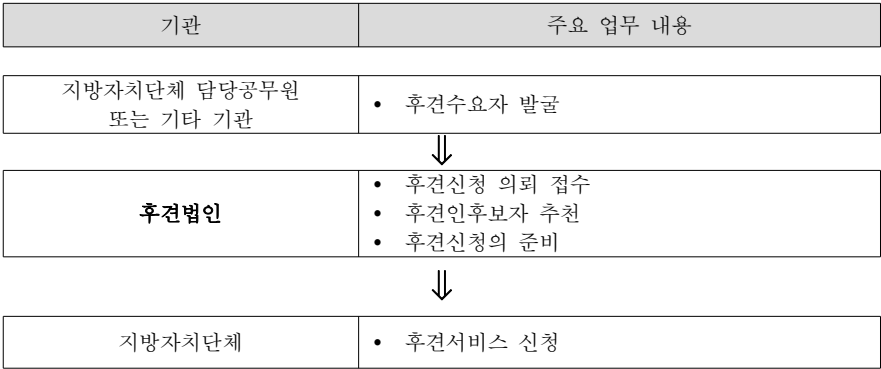
2) 후견신청 절차 개선

발달장애인법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반드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다시 후견법인에게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발달장애인지

원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후견법인에게 추천을 바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후견신청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경로를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후견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법인에게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바로 의뢰하고(<그림 4-4-1> 참조), 후견법인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그림 4-4-1] 후견법인이 있는 경우 후견신청 경로



제 5 장

자조단체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국내외 현황
-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 제4절 시행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자립생활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 보장, 자조집단을 통한 권한 강화(empowerment), 사회적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유형별로 혹은 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조집단이 구성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소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인에 의한 단순 보호와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에는 발달장애인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이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경험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자조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미정, 2012).

발달장애인의 자조그룹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와 달리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의 자조집단이 형성되어 활동해 왔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피플퍼스트(People First)’ 등과 같은 전국적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결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자기옹호훈련, 동료상담, 리더교육과 같은 을 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자조집단을 지원하는 조력자 교육을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인 당사자의 의견과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이외에 사회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인식개선보다도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된 자조집단의 활동이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는데 있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부 장애인과 부모관련 단체들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고,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 개념 및 정의

가. 자조단체의 개념

집단의 성격에 따라 자조단체의 개념과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조단체는 공통의 경험과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전문가에 의한 개입보다는 구성원간의 상호지지와 협력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규모 모임이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Borkman, 1976; Katz & Bender, 1976; Katzetal, 1992). 국내 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경준(2006)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조단체의 성격을 공유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자조단체를 “공동의 혹은 유사한 장애특성을 안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각 개인들이 자발적 의지와 협력적 상호 연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경험 및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정서적지지 및 상호 환류로써 문제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인, 사회(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소규모 결사체”라고 정의하였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그 동안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자조단체나 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정의와 크게 차이점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그 동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활동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발달장애인 본인들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를 정의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계획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체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국 손을 잡은 육성회’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그룹 활동으로 시설 등과 같이 제한된 곳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서로 지지해가며 사회를 이해하고 활동하며, 결정은 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保積(2007)은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모임의 성숙 정도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서로 같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자신들이 공유할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의 생활이나 생각을 이해하며, 당사자인 본인들만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Perske(1978)는 자조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위해 지역사회 시민으로써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자조단체의 기능과 역할

자조단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Nirje(1980)는 발달장애인이 자조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한정된 장소와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되어 왔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매개하는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保積功一(2007)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자조단체의 기능을 크게 ‘자조기능(self-help)’과 ‘자기옹호기능(self-advocacy)’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조기능과 관련해서는 자조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친구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서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한편, 자기옹호기능에 대해서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이 자조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옹호활동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옹호 활동을 통해 공통의 이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대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조단체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얻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여 왔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지원하여 왔던 일본의 ‘전국 손을 잡은 육성회’는 그 동안의 자조집단 활동경험을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자조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는 동시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 만들며, 자기선택과 결정과정을 통해 자아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상호 조언과 도움을 주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¹⁰⁾

다. 자조단체의 유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고, 발달장애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상 자조단체 활동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서 다른 집단과는 달리 일정 정도의 기관 지원이나 조력자의 지원이 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성격은 개별 자조단체의 세부 활동내용과 목적뿐만 아니라 단체를 구성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력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을 연구해 온 일부 학자들은 자조집단이 어느 정도 자율성(혹은 독립성)을 구현하는가를 기초로 하여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유형을 제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Rhoades(1986)은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유형을 자치적 그룹, 부분적 그룹, 서비스 시스템 그룹, 연합그룹으로

10) 이는 다음과 같은 자조집단 활동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둘째, 상담을 할 수 있다. 셋째, 여기가 틀리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등 의견을 말해 준다. 넷째, 친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용기가 난다. 여섯째,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곱째, 주눅 들지 않게 된다. 여덟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게 된다. 아홉째, 레크레이션 활동을 비롯해 공부모임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열번째, 행정기관과의 관련이 생겼다.

나누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치적 그룹은 조직운영이나 재정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자율성이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적 변화나 서비스로부터 자주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 시스템 그룹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거나 일하는 기관의 직접적인 운영에 따라 자조모임이 형성되는 형태로 인적,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반면에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조모임이 좌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부모나 전문가 조직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부분적 그룹은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원 조직과의 의견차이로 이해충돌이 야기될 수 있고 지원조직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합 그룹의 경우 다른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활동을 하는 형태로 연합을 통해 옹호기술을 학습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사표현과 결정에 있어 일정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다른 장애 유형의 참여자들에 의해 반영되지 않거나 묵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Rhoades(1986)의 유형 분류와 비슷하게 일본 육성회는 자조집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유형을 크게 지역형, 서비스 시스템형, 부문형,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역형은 부모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전개하는 형태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참여자들의 회비를 모아 충당하는 등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단체나 관련기관의 산하에 만들어지면서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부문형과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하나의 모임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네트워크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 시스템형은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나 사회교육활동을 통해 생긴 시설 내 자치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조모임 활동비가 기관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자조모임의 활동 또한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자원, 운영주체, 소속, 권력관계 등에서 얼마만큼 자조집단이 독립성과 자기주도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아래 <표 5-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즉, 재정, 운영주체, 활동의 결정 등 모든 면에서 발달장애인이 직접운영하거나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자치형’과 다른 장애인관련 단체와 연합형

태로 운영되는 ‘연합형’, 부모나 전문가 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이들 기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문형’, 기관 내 존재하며 자원과 운영을 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1> 독립성에 기초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유형

구분	기관형	부문형	연합형	자치형
재원	기관 부담	기관지원	회비, 후원	회비, 후원
운영주체	기관 운영	기관 지원 운영	연합 운영	직접운영
소속	기관 직속	기관 산하	연합체	독립
권력관계	존재	일부 존재	부분 존재	없음
장점	물적, 재정적으로 안정적	다양한 지원에 접근 가능	융호 능력 및 사회적 영향력 향상	자율적 활동가능 이상적인 형태
단점	기관의 의해 좌우됨	의존적이기 쉬움	다른 장애 유형에 좌우될 우려	제도의 변화 등에 둔감

제2절 국내외 현황

1. 해외 사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북유럽인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로 전파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스웨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생성배경과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웨덴

1960년대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가 전파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 부모, 전문가, 시설관계자들이 모여 전국 지적발달장애아동·청소년·성인협회(För barn, unga och vuxna med utvecklingsstörning; FUB)를 창설하고, 1968년 「지적장애인권리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견

이나 요구를 듣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공통된 취미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클럽’형태로 교류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FUB는 지원을 받으며 자기옹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여 마르메에서 최초의 당사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에 당사자 중심의 청년부를 FUB 산하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자조단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FUB 산하 청년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FUB전체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여 보장 및 읽기 쉬운 정보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84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FUB의 중앙회 이사로 선임되어 발달장애인 리더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FUB에서 발달장애인이 움부즈맨으로 활동하면서 점차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최근에는 Klippans조직(당사자조직)을 통해 전국 60개 산하에서 7명의 발달장애인 리더가 6주마다 공동이사회를 개최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투표, 주거, 직업, 편의제공(예: 버스정류장이나 병원에서 그림문자, 사진 등을 함께 표기하기), 개인별 계획 등을 주제로 옹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Klippans에서 조력자는 정보제공, 설명, 격려, 기록과 같은 활동을 하며, 당사자 활동을 방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

스웨덴과 1960년대 시민 권리운동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자조단체는 1974년 오리건주에서 약 560명의 발달장애인이 모여 탈시설과 정신지체라는 명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I want to be treated like people first!”라 외치면서 자조단체는 “People First”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후 5년 동안 오리건 주에서 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네브래스카, 워싱턴, 캔자스 등으로 지부모임을 확대하며 42개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지역 People First는 지부를 결성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부의 결성과 확산, 리더의 역할과 조력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2-1> 리더와 조력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	조력자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 모임관리와 조직 기술 • 모임 절차를 따르기 • 문해능력 • 헌신하는 사람 • 외향적 성격 •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 • 지난번 모임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 용모가 단정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태도로 지원을 제공하기 • 의사소통 지원(모임에서 의견은 말하지 말 것) • 모임 준비하기(자료와 기구 준비 등) • 발달장애인이 요청하는 지원에 대하여 이해할 것 •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대처방안 고민하기 • 회의실 뒤에 앉기 • 당사자가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를 알기 • 모임 동안 개인행동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기

자료: People First manual(2000). Missouri People First Members & Advisors

한편, 1991년 지역의 자조단체 조직이 연대하여 만든 발달장애인 자기옹호연맹(Self-Advocates Becoming Empowered: SABE)은 격년으로 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적·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과 지방정부의회는 SABE를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당사자 단체에 대한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SABE는 2002년 통과된 선거법(Help America Vote Act: HAVA)을 통해 유권자로서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며, 새로운 유권자 층으로 발달장애인을 부각하여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1949년 교육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모임(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Children's Parents' Association: IHCPA)에서 시작하여, 1975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뉴질랜드 사회(the New Zealand Society for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로부터 지원을 받아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클럽형태로 운영되던 자조모임은 1990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서

비스 제공기관의 평가관리조직(Standards & Monitoring Services: SAMS)의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IHC로부터 분리하여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피플 퍼스트를 조직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Butterfly Express라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내용은 개인 예산 사용과 같은 정책부터 리더 교육, 일상 등을 소개하며, 당사자 스스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은 부모단체 ‘전 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의 지원을 받은 ‘본인대회’와 미국 자립 생활패러다임에 기초한 ‘피플 퍼스트’를 중심으로 자조단체가 발전되었다.

먼저, 부모단체인 ‘손을 잡는 육성회’ 회의에서 1989년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며 ‘본인부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자조 단체인 ‘벚꽃회’가 조직되었다. 1992년에는 도쿄 첸쇼렌 대회¹¹⁾ 지적장애인 분과에서 지원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며 ‘전국지적장애인교류모임’이 발족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본인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2005년에는 내각부 장애인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해 만들어진 중앙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에 발달장애인을 정식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2014년부터 본인대회는 ‘손을 잡는 육성회’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제 1회 자조단체 대회를 개최하였다.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받은 Japan People Frist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 피플 퍼스트 대회에 참여하고 돌아와 1994년 ‘제1회 지적장애인교류모임’을 개최하고, 1998년 정식으로 Japan People Frist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오사카 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 일본대지진이 일어난 해를 제외하고 2015년 고베까지 매년 21회의 전국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마다 500~1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Japan People Frist는 2004년부터 시설내의 학대문제를 제시하고, 자립지원 법안을 제안하며 한국의 자립생활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 People First 이념과 내용을 전하고 있다.

11) 첸쇼렌 (全障連) : 전국장애인해방운동연락회(全国障害者解放運動連絡会議) 1976년 결성된 일본 장애인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푸른잔디회 등의 조직 등이 참가하며 일본의 장애인인권운동을 주도하였었다.

2. 국내 현황

국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아직까지 독자적인 단체라기보다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단체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파생되거나 이들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구성된 소규모의 자조집단 혹은 자조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그 뿌리를 두고 행해져온 대표적인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례는 2013년에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들이 모여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를 구성하고 자조집단 활동을 지원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당시 9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서 행해진 자조모임은 태동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활동형태를 살펴보면, 직업재활서비스를 거쳐 취업한 발달장애인들의 친목모임인 경우와 문화 생산 활동(신문, 사진 등)과 권익옹호 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윤재영, 2014).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부모 단체들의 지원 하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들 역시 태동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각 기관의 목적이나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왔다. 아래 최근의 사례조사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자조집단은 자기결정, 자기옹호, 자립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행해진 곳도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 자조집단은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결정과 계획 하에 자기주도적인 문화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표 5-2-2>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사례

지원기관	자조집단의 성격 및 주요 목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단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주체적인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4개 자조모임을 초기에 각각 운영하고, 이후 연합하여 자조단체 결성 공간, 조력자, 활동 경비 지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원하는 활동을 결정하고, 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 시작당시 회원은 5명이었으나 현재 20명으로 확대됨 공간, 조력자, 활동 경비 지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동료 간의 관계 형성 및 문화, 체험 활동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자조모임이 결성. 월 2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짐 공간, 조력자, 활동 경비 지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 직업, 여가·문화를 중심으로 주간활동과 연계하여 자조모임을 구성 공간, 조력자, 교육 및 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 부모 단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자조모임을 구성. 외부 조력자와 연계하여 출사, 전시회 등을 주제로 자조집단 활동을 이루어나감 조력자, 활동 경비 지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재단 기금지원으로 자조모임을 시작. 현재 리더 2명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하여 월6회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 공간, 조력자, 활동 경비 지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3년 후 자조단체 구성 6개월 임기로 리더를 선출하고, 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월 2회 여가문화, 체육, 친목도모, 자기옹호 등의 정기적인 활동과 모임을 진행 공간 지원

자료: 최복천 외(2014).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분석 연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형태로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을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는 활동 사례들인데, 아래 예시처럼 거주시설 내 발달장애인의 ‘자치회’ 형태에 준하는 자조모임을 통하여 권리옹호를 꾀하고자 하거나 비슷한 삶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활동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표 5-2-3> 거주 시설 기반의 자조모임 활동 사례

구분	자조모임의 성격 및 주요 목적
집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결혼을 통해 자립한 발달장애인 부부의 자조 모임으로, 모임을 통해 서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교환
집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대표자들이 모여 자조모임을 구성 거주시설 생활개선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고자 함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결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해외의 경험과 유사하게 독자적인 형태로 시작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복지시설이나 부모 단체 등의 기관 산하의 모임으로 시작되고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활동 공간’, ‘조력자’, ‘활동 경비’ 등을 그들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이 초기에 결성되고 운영되는데 있어 조력자의 역할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부 단체들은 아래 제시된 예와 같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들 자조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었다.

<표 5-2-4>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력자 양성교육의 예시

목차	교육 내용
1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자조집단 활동현황
2강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
3강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이해와 관계 맺기
4강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5강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이해
6강	발달장애인 조력자의 역할과 자세

자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부자료

국내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활동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현재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조활동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교류의 장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조력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써 역량강화를 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하에 여러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대회마다 구

체적인 진행방식이나 활동내용은 차이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대회의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내용과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대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대회는 단체 간의 교류, 자조활동 사례 공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권리, 일상, 여가, 직업, 이성 관계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옹호하는 내용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2015년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에 맞물려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대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5> 2015년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

대회명	전국발달장애인 자조단체대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	우리는 하나다!!!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지역공동체센터연대체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주요 대회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단체 대회 준비과정 보고 참가 지역별 자기표현 일본피플퍼스트 참가기 차별과 인권 발표하기 만찬 및 동료 만들기 초청공연과 댄스파티 자신의 권리 알아보기 소감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플퍼스트 소개 일본피플퍼스트 참가 보고 발달장애인 요구 설문조사 보고 발달장애인의 경험 분과회의(연애, 취업, 직장, 결혼, 자립) 공연(당사자공연, 초청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스체험(직업 OX퀴즈, 미술, 방송댄스, 수다, 보드게임 등) 기관별 장기자랑 명랑 운동회
진행 방식	1박 2일	1일	1일
참여 인원	340명	350명	230명

자료: 전국발달장애인자조단체대회, 발달장애인당사자대회,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내부자료

[그림 5-2-2] 한국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포스터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자조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조력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조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 부모단체, 장애인단체 등의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총 6명의 조력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견 수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자조단체 활동 지원, 조력자 지원, 자조단체 교류 지원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5-3-1> 집단면담 시 주요 질문 내용

영역	세 부 질 문 항 목
자조단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단체 주요 활동 내용 및 목적 • 자조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조력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자의 필요성 및 역할 • 조력자 교육 및 양성
자조단체 교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단체 교류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 • 자조단체대회의 의미와 지원 방향

2. 조사 결과

가. 자조단체 활동 내용 및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들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었지만, 크게 ‘사회참여활동’, ‘자립생활역량’, ‘자기옹호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활동영역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한 강조는 발달장애인이 현재 처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자조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과 생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조단체 활동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이 가능한 한 자립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개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조단체 활동은 그 동안 한정된 장소와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된 틀을 벗어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서 누려할 할 일반적인 삶의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 자체도 발달장애인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조단체의 여러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옹호활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자조단체 활동이 기존 기관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표 5-3-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주요 활동영역에 관한 의견들

영역	주요 의견 내용
사회참여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내부 프로그램은 유아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연령대에 맞는 지역사회 내의) 카페, 멀티방, 호프집 등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학령기에는 소풍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 누리던 영화관람, 노래방 이용, 문화 관람 등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이 성인기 이후에는 오히려 단절되기에 자조단체 활동을 통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어떤 장소를 택할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도록 함
자립생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단체 활동에서 타인을 만나며 외모 꾸미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기, 활동 중에 비용을 계획하고 지불하기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함 활동 중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자기옹호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 선출 경험을 바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투표과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수행하기도 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기도 하고 직접 옹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자조모임 활동 안에서 자기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발달장애인에 게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때로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어려움의 하나는 자조단체 회원들이 자유롭게 모이거나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간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와 더불어 자조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소득이 없는 상황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필요로 하는 활동을 행하지 못하거나 자조모임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나. 조력자의 역할과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다른 자조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특별한 성격을 지니는 것 중의 하나는 자조단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력자’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조력자가 어떤 역할과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조단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관계에서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인권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력자는 지시하거나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표 5-3-3> 조력자의 자세에 관한 의견들

	주요 의견 내용
조력자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자는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림자가 되어야 하며, 말이 아닌 가슴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 • 조력자는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민감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수직적 관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력자는 발달장애인과 평등한 관계 맺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른 집단과 달리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조단체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력자가 수행해야 하는 여러 역할들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정보제공, 의사소통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선택과 자기결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제공, 구성원들 간의 갈등 중재 등의 역할들이 참여자들 대부분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연락망을 만드는 일, 공간을 구하는 일, 리더를 선출하는 일 등 자조집단의 초기 구성과 집단 유지와 관련해서도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조력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조력자 교육 및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자조단체 교류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욕구에 충실한 활동들이 자조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조단체들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자조단체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자조단체의 활동사례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조활동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적 인식이 확대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역시 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경험을 나누면서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며,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4> 자조단체 교류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발달장애인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의 교류와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개인적 성장과 이타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다른 자조단체 회원들과 함께하면서 경험이 확장되는 것 같음 • 다른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며 지지 세력이 되어주기도 함 • 대학교 동아리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이 확장되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배우는 것 같기도 함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를 지원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같음 • 다른 자조단체의 조력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함 • 다른 자조단체 조력자들과 조력을 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함

자조단체 간의 개별적인 교류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당사자대회’라는 형태를 띤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개진하였다. 조력자로서 당사자대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참여해 온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전국적인 차원의 발달장애인 교류대회는 단순히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집합적인 힘을 확인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류의 장을 통해 자조단체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해 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발달장애인 교류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표 5-3-5> 전국 당사자 교류 대회에 관한 주요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전국적인 교류대회의 의미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이 발휘됨 • 동료라는 의식이 싹트는 것 같고, 다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함께 옹호해야 한다는 권리의식을 표현하기도 함 • ‘우리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어떤 집합적인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음 • 발달장애인이 직접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시각도 점차 변화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음 • 전국대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신장이나 자조단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해외처럼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4절 시행방안

1. 법적 근거 및 주요 검토 사항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에서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조단체’의 구성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부여하고 있다.

■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되는 자조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모색한다고 할 때, 이때 지원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국내 자조단체 특성과 지원 방식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이념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고, 발달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며, 참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단체 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구성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상 대부분의 자조단체들이 활동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 일정정도의 기관지원이나 조력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자조단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은 아직까지 독자적인 단체라기보다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단체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파생되거나 이들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구성된 소규모의 자조집단 혹은 자조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이 속한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부분 지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점차 자조활동 경험이 축적되고 발달장애인 리더들이 발굴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형’ 자조단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현 단계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이들의 자조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한다고 할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 신청, 관련 자료의 정리, 사업 보고 등 일련의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를 간과할 수 없기에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지원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가.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발굴·육성하고, 발달장애인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자조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을 고양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조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력자 교육 및 양성, 의사소통 지원, 공간지원 등 자조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한다.

나. 사업 대상

자조단체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자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자조단체 활동이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단체의 규모, 특성, 활동 내용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즉, 매우 소규모의 친목모임 형태부터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다수가 참여하는 활동 형태를 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자조단체 활동지원이라는 목적상 부합되지 않다. 따라서 사업 대상은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으로써 현재 자조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자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건(예를 들어, 6명 이상)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사업 지원기관

자조단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단체 구성원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에 의해 선택되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조단체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조단체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조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 사업의 신청, 운영 지원, 보고 등 일정정도의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

고,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제반 지원, 조력자 교육 및 양성, 단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사업 지원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¹²⁾

지원기관 선정은 공모사업 형태를 가지되 자조단체 활동 참여자의 자발성, 자조활동 계획 및 내용, 자조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기관 선정 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목적성과 자기주도성이 얼마큼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기관을 선정한다고 할 경우에, 지원기관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자조활동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라. 사업 내용

1) 프로그램 구성(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5-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조활동, 자조단체 교류, 조력자 교육 및 양성 등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자조단체 내의 활동이 본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조활동’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반면, 국내에서 욕구가 강한 ‘자조단체 교류’와 ‘조력자 교육 및 양성’은 선택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자조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선택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을 수행하도록 한다.

12) 사업 신청,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등 관련 행정 처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업의 내용인 자조단체 활동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본인들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 실행된다는 이념적 가치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업수행기관’ 보다는 ‘사업지원기관’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표 5-4-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 내용

구분	참가 대상	내용
자조활동 (기본)	발달장애인,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활동 • 옹호 활동 • 자립생활 향상 활동 • 특별 활동
자조단체 교류 (선택)	발달장애인,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교류 • 자조단체 대회 참여 • 일반 장애인, 시민단체와의 교류
조력자 교육 및 양성 (선택)	조력자/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자 역량 강화 교육 • 조력자 양성 교육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 구성 하에 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현재 운영되고 국내의 자조단체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안)

○ 지원기관 1개 당 약 20,000천원 사업비 지원

－ 자조단체 당사자 활동 및 교육비 9,600,000원(200,000원×4회×12월)

－ 자조단체 조력자 인건비 4,800,000원(50,000원×2인×4회×12월)

－ 조력자 교육 및 양성(선택1) 4,500,000원(강사료 150,000원×30시간×연 1회)

－ 자조단체 교류(선택2) 4,500,000원(숙박, 교통, 대회참가비 등)

－ 기타 운영비 15,000,000원 (회의비, 인쇄비 등)

2)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자조활동 프로그램

자조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영역별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5-4-2>와 같다. 이는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조활동을 크게 ‘옹호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립생활 향상 활동’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영역의 활동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자조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특별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자조단체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표 5-4-2> 자조활동 프로그램 예시

유형	프로그램 내용 사례
옹호 활동	의사결정하기, 욕구 표현하기, 장애인식과 수용, 권리 인식, 평등한 관계 맺기, 자기옹호기술 훈련, 동료상담 등
사회참여 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직업체험활동, 여행, 친목활동 등
자립생활 향상활동	금전관리, 식생활 및 건강관리, 안전관리, 지역사회 관계 맺기, 종교생활, 참정권 행사하기 등
특별 활동	참여자 및 자조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체 기획 활동

나) 자조 단체 교류 프로그램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은 자조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 단체 성원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간의 교류를 통해 자조활동 지원에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면서 발달장애인의 자조활동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아래 표<5-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 지역의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 내 다른 장애인 혹은 일반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권리 옹호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교류나 전국적인 차원의 다양한 자조단체 대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과 권리 함양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4-3>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 예시

	활동 사례
자조단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의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와의 교류 • 지역 내 장애인, 일반 시민 단체와의 교류 •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준비하기와 참여하기 • 해외 발달장애인단체와의 교류 • 해외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참여하기

다) 조력자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는 조력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력자는 자조단체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자조단체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해서도 아래 표 <5-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력자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력자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표 5-4-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을 위한 조력자의 지원 역할

조력자의 역할	역할 수행 예시
구성원의 역할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장점을 찾기 성취를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기 개인의 변화를 포착하고 독려하기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된 양의 정보를 쉬운 언어로 전달하기 그림, 사진, 몸짓 등 활용하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지 구성하기
의사소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답을 듣고자 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리기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사용 피하기 추상적 단어보다 구체적 단어 사용하기 시각적 보조물 등 관계적 맥락 안에서 지원하기
자기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 자기결정, 의사결정의 기회 제공하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결정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안내하기
자조단체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시 지원하기 공통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에 자조단체 활동 조력자 양성과정의 교육(안)을 구성하여 제시하면 표<5-4-5>와 같다.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인권, 자조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조활동과 단체 운영에 있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조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실습과 자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표 5-4-5> 조력자 양성 과정 교육(안)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총 30시간)
자조집단 지원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권리옹호	2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에 대한 이해	2
	조력자의 자세와 역할 이해	2
조력자의 역할과 실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구성 및 유지 지원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의사소통 지원	4
	자조활동 기록하기와 성찰적 자기 평가	2
실습과 평가	자조모임 참관 및 실습 1	4
	자조모임 참관 및 실습 2	4
	경험나누기 및 종합 평가	2

제 6 장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국내외 현황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제4절 시행방안

6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 <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필요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발달장애 특성 상 더 많은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와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크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지원의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는 더욱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률 제31조), 전문 상담의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뿐 아니라 부부 및 가족 심리상담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동료상담도 이들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1조). 이에 따라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들 중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 동료상담을 통하여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같은 장애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지원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차이를 지니게 된다. 즉,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워본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깊은 공감을 통해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장애특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과 구체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 개념 및 정의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 동료 상담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앞서 일반적인 동료상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Gray와 Tindall(1978)은 동료상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문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대인적인 조력행동’으로 정의하였다. Painter(1989)는 동료상담(peer counseling)에서 충고보다는 공감과 존중감을 지닌 채 또래들에게 경청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동료상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진시켜 자기 자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적 영역이 많다는 점, 동료상담자 자체가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는 점, 전문적인 상담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개역할을 한다는 점, 동료상담자 자신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의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료상담자들은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의 범위와 한계,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이 필요하다(유근준, 2001). 즉, 동료상담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이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대치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김광은, 1992). 또한, 동료상담 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대등성, 비밀보장, 무비판적 사고, 충고나 조언 금지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담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대등성이라 하겠다(정지훈, 201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1).

동료상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간 및 내용에 대해 Allen(1973)은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은 비슷한 가치나 생활경험의 공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훈련으로 동료상담자의 자치 체계가 변화되는 경우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여러 연구의 예를 살펴보았을 때 동료상담자 교육프로그램의 시간으로는 일반적으로 10~20시간정도이며, 많은 경우에 3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김광은, 1992; 김정희, 1990; 오정인, 1993; 이수용 등, 1990; 장혁표, 1986; 추석호, 1987; 홍경자, 1985; Tindall et. al., 1985; Frisz, 1986). 일반적으로 동료상담자 훈련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실습자 교육에서 선수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론교육보다 구체적인 상담 기술 및 동료상담자가 감당해야 할 실무적인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상담기술 및 실무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공통적으로 경청하기, 관심기울이기, 온정표시와 공감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기술훈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문제 영역의 교육 및 훈련 내용이 제공된다.

한편, 위기에 처한 가족지원에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복력(resilience)에 기반한 입장은 아무리 취약한 가족이라도 모든 개입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가족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은 회복력(resilience)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가족 고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여도 이에 대해 대처하는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이러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회복력(resilience)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전문가 주도의 심리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 처한 비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과 유사한 해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행되고 있는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을 들 수 있다.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정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부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이 된 경력 있는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서툰 부모를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 지원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Santelli, Turnbull, Marquis, & Lerner, 1997). 여러 문헌을 통해 부모결연프로그램의 의의와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Herbert et al., 1999; Ireys et al., 2001; Santelli et al., 1997; Santelli, DiVenere, Yoder, & Carolis, 2000;

Santelli, Turnbull, Marquis, & Lerner, 2000; Santelli, Poyadue, & Young, 2001; Singer, Marquis, Powers, Blanchard, Divenere, Santelli, Ainbinder, & Sharp, 1999), 현재 미국의 모든 주(state)에는 지역단위 및 주 차원(statewide)의 부모결연프로그램이 마련되어 15만 명 이상의 장애아동 부모가 참여하고 있다(Beach Center on Disability, 2015).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에서 맺어지는 결연 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원이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원과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 중 중요한 점으로 부모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지원은 제한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24시간동안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이다(Santelli, Poyadue, & Young, 2001). 또한 부모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매우 개별적이며 지원을 받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즉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결연을 맺기 때문에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와 지원을 제공받는 부모가 장애자녀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이 유사함으로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 및 정보적 지원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같은 입장의 비전문가들이 서로 조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료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부모가 같은 장애인의 부모에 대해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과 유사하다. 즉,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에게 유사한 장애자녀를 키워낸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

제2절 국내외 현황

1. 해외 사례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의 Part B에 해당하는 관련 서비스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도록 부모를 도와주고, 아동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주고, 개별화교육계획(IEP)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것’(34 C.F.R. Sec. 300. 24(b)(7))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대상은 생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가능 연령인 만 21세까지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며, 이를 넘어선 성인기 장애인에게는 가족지원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별 서비스지원 개념으로 접근한다.

0~3세 영유아의 부모는 가족훈련, 상담, 가정방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기타 전문가가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높이고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34 C. F. R. Sec. 303. 112 (d)(3)). 장애아동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 아동발달을 고취시키는 문제해결력, 아동과 가족이 최상의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의 정서적 지원 방법 중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으로 유사한 경험을 지닌 가족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 개관

미국의 Parent to Parent USA은 1971년에 처음으로 Nebraska 주의 사회복지사 Shirler Dean가 장애아동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주에서 부모결

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이 생기게 되었고, 1992년 Betsy Santelli가 국가차원의 부모결연프로그램 연구를 실행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2003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부모결연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약 15만 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매년 7천명 이상의 지원 부모들과 짝을 이루어 만남을 가진다.

2015년 현재 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34개가 있고, 주 단위 이하의 행정단위 및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수백 개가 넘는다.

□ Parent to Parent USA 재정

Parent to Parent USA의 재정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수익 사업, 회원들의 회비(민간의 경우)으로 충당되고 있다. Parent to Parent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지원단체가 있으며 해당 단체에서 지원부모를 훈련시킨다.

일례로, 워싱턴 주의 Parent to Parent 프로그램은 단체(the arc of Washington state)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의하여 일부 진행되며, 장애아동 부모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¹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소한의 기부(50달러)를 통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기꺼이 허용되고 모든 교육비 및 운영비는 무료로 진행된다¹⁴⁾.

□ Parent to Parent 지원 부모 자격과 교육

미국의 Parent to Parent 는 각 주마다 시행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원부모의 자격과 지원부모를 위한 교육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특징이 있다.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가 사전에 받는 교육은 1~2시간(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1시간, 뉴욕 주는 2시간)에서 길게는 2박3일(비영리단체 CHADD)까지로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및 직접수강(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총2시간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시행된다.

교육내용 역시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을 교육한

13) 출처: <http://arcwa.org>

14) 출처: <http://www.php.com>

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1> Parent to Parent 교육 사례

구분	교육 내용
캘리포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연결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 진단에 적응하는 법 • 지원 부모의 특징 • 지원받는 부모와 통화하는 방법 • 효과적인 청취 기술 • 추가적인 전문가 도움을 받게 하는 방법
버지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지원 능력과 자기성찰 • 청취 기술과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파트너/가족 네비게이터의 역할 • 지역 사회 자원과 서비스 이해 • 부모연결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의 이해 • 새로 습득한 기술에 대한 연습, 협업 및 협상 기술

자료: *Parents Helping Parents(www.php.com)

**Parent to Parent of Virginia(www.ptpofva.wordpress.com)

□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하는 부모 연결

미국에서는 매년 약 15만 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매년 7천명 이상의 지원 부모들과 짝을 이루어 만남을 가진다. 즉, 교육을 받은 선배부모 1인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후배부모 2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와 지원을 받는 부모를 연결해주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 자녀의 장애 유사성, (2) 비슷한 연령의 장애자녀, (3)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가족, (4) 유사한 가족형태, (5) 24시간 이내 지원에 응할 수 있는 부모, (6)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 할 것¹⁵⁾.

일례로 뉴욕주 부모결연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부모 짝 선정 시 코디네이터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¹⁶⁾.

<표 6-2-2> 뉴욕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코디네이터의 역할

	내용
지원 부모 짝 선정 시 코디네이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족과 맺어지기를 요구하는 부모의 모든 적절한 정보를 얻도록 함 •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부모를 위해 적절한 지원 부모를 찾음 • 선택된 지원 부모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봄 • 만약 지원 부모가 지원을 받을 부모를 받아들인다면, 코디네이터는 지원 부모에게 지원받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지원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48시간 내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받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원 부모의 이름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통화하도록 독려함 • 양측의 부모들은 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를 상의한 후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함 • 만약 두 부모들 모두 동의하면 이 연결은 성사된 것임 • 한쪽의 부모라도 다른 파트너를 원하면 코디네이터는 더 좋은 파트너를 찾도록 함

□ 지원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지원 부모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다른 가족들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 부모는 의사의 진단이나 또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원 부모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지원 부모가 요청을 하면 지원제공 인력풀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미주리주에

15) 출처: www.p2pusa.org

16) 출처: www.parenttoparentnys.org

서 지원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의 예를 보여준다¹⁷⁾).

<표 6-2-3> 미주리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지원부모의 지원 내용

	내용
지원부모가 제공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고 이해하기 • 장애 또는 특별한 건강관리의 필요에 대한 정보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 • 자신의 경험 이야기

2. 국내 현황

가. 동료상담 관련 국내 사례

1)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동료상담

우리나라에서의 동료상담은 1980년대 이후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일선 중고등학교에 또래상담자프로그램이 제작 보급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비행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을 부르는 명칭이 동료 상담과 또래 상담이라는 두 가지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또래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규섭(1988)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상담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자아실현 향상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김태창(1985)과 정춘옥(1989)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동료상담의 효과를 밝혔다. 청소년을 위한 동료상담(또래상담) 교육은 199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되어 2000년에 개정된 또래상담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때 동료(또래)상담자의 교육 시간은 12시간 과정으로 ‘좋은 친구되기’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친구되기’라는 주제의 집단

17) 출처: www.mofamilytofamily.org

토의, 역할연습,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상담이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으로 적용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대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동료상담이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정희, 1990; 이관용, 김순화, 1983; 이형득, 김정희, 1983; 장혁표, 1986; 최은영, 1991; 홍경자, 노안녕, 1985). 대학생들에 대한 동료상담은 일반적인 학교 적응과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연 지지집단 동료상담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위한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황혜리, 2002).

2) 다양하게 적용되는 동료상담

동료상담이란 ‘비슷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동료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그 발달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서(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동료상담은 청소년 뿐 아니라 결혼이주자, 사관생도, 군 장병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효과가 많이 밝혀졌다.

김광은(1992)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받은 생도들이 다시 동료생도들에게 동료상담을 실시하게 한 연구에서 동료상담자들과 그들에게 훈련을 받은 생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개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고(양미진, 송미경, 신효정, 2009), 군 장병들이 동료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얻고 군대 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었을 밝힌 연구(양미진, 송미경, 신효정, 2009)도 있었다. 또한, 한숙자(2011)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중 동료상담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3) 장애인 동료상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은 자기의 장애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출발점이 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라는 공통된 경험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 자신이 동료장애인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로 인해 생겨난 문제 및 욕구를 바탕으로 독립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혹은 집단 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4a).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동료상담은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4b).

장애인을 위한 동료상담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김순영, 2011; 임기현, 2003; 정지훈, 2013), 임기현(2003)에 의하면 동료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자립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었으며, 김순영(2011)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지훈(2013)은 동료상담서비스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하였다.

나.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관련 국내 사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다른 장애인의 부모에 비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도움의 정도가 크고 자녀가 성장을 하여도 양육과 관련한 요구와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신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역량강화(empowerment)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전혜인, 2010; 전혜인, 박지연, 2004).

국내에서는 전혜인(2005)의 연구가 처음으로 발달장애아동 부모들 간의 부모 동료상담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밝혔는데, 자신의 장애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미리 일정시간동안의 교육(의사소통 방법 및 장애에 대한 조망, 구체적 정보 등)을 받고 어린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일대일 대면 만남, 집단만남, 전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참여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어

머니들에게 부모결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들(전혜인, 박지연, 2005; 전혜인, 박지연, 2006)도 있다. 전혜인과 박지연(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결연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실시한 결과, 어린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결연활동을 통하여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으며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람과 만족함을 경험하였고, 결연활동에 참가한 성장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결연활동을 통하여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었고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였으며 보람을 느꼈고 스스로 성장하였으며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발달장애아동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은 부모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한 부모 역시 정서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역량강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2012년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행복 플래너 사업’에서도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이 실시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발달장애 자녀(장애위험 유아 포함)를 둔 부모들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부모결연활동가)가 어린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교육기관 관련 정보나 지역사회 이용 정보 및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의 현실적인 양육정보와 조언을 포함하는 지원을 제공하게 하였더니 지원받은 어머니들이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2014년~2015년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의 목적은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전문 장애인부모상담사가 동료 장애인부모의 양육고충을 덜어주고 동료상담사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며 장애인부모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15주 동안 8학점(교과목: 장애인복지와 개발, 상담의 이론과 기술, 상담의 실기) 120시간의 이론 강의의 수강과 120시간의 현장실습, 12건의 상담일지 작성을 통하여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전문 장애인 부모상담사가 의뢰된 장애부모를 상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부모 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여자는 전국단위의 부모단체 실무자 및 부모였으며, 의견수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에서 지원하는 부모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나? 지원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 지원 부모에게 교통비 및 활동비 지급이 필요한가? 실행과 관련한 기타 제안은 무엇인가?

2. 조사 결과

가.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및 교육

부모에 의한 동료 상담서비스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동료상담을 제공하는 지원부모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자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최소한의 교육조건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관련 부모단체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 입장은 장애자녀를 키운 경험이 지원부모의 가장 큰 자격조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동료상담을 제공할 부모에게 최소한의 교육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동료상담을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라 할 지라도 전문가에 준하는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맞서기도 하였다. 제시된 두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 조건 완화 방안

이 방안은 부모 동료상담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 의한 정보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료상담 지원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경험 및 대화 기술, 지역사회 자원 이해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이수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며, 이 때 교육시간도 적게는 6시간, 많게는 20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렇게 최소한의 교육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보다 다양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동료적 지지를 행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하며, 부모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다만, 낮은 진입관문으로 인하여 자칫 일부 부모의 경우 부적절한 상담을 행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되기도 하였다.

<표 6-3-1> 자격조건 완화 방안의 장단점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동료상담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역할 비중이 더 중요함 • 부모 동료상담 부모가 이수해야 할 교육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6시간, 10시간 또는 2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봄 • 부모 동료상담은 비슷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를 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는 것임. 따라서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보다 많은 부모가 지원 부모로서 활동할 수 있음 • 낮은 진입관문이어야 많은 부모들이 부모동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고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술이 부족한 부모가 잘못된 상담을 할 수 있음 • 준비가 부족한 부모가 잘못된 장애관련 정보를 전할 수 있음

□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조건 강화 방안

이 방안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행하는 동료 상담이라고 할지라도 상담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상담가 양성과정이나 부모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에 준하여 약 200~300시간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그 자격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조건 강화방안의 장점으로는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함양된다는 점과 많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 지원 부모 동료 상담가로서의 책임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향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 동료’라는 동등성이 사라져 동료상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높은 장벽으로 인해 많은 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워 자녀의 장애특성에 맞춘 짝 선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 동료 상담을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6-3-2> 자격조건 강화 방안의 장단점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시간의 상담 교육을 받음으로 전문성 향상 • 동료상담가로서의 책임성과 적극적인 활동 향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간의 동등한 관계가 사려져 동료상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많은 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움 • 지원부모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짝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와 차별성 찾기 어려움

나. 부모 동료상담 운영 관련

부모 동료상담을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경우 동료상담을 제공하는 부모에게 일정정도의 보수 혹은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 동료상담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타 부모에 대한 동료적 지원에 가깝기 때문에 상담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혹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상담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오히려 부모 동료 간의 자발적인 지원 활동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부모 동료상담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있어 먼 거리 이동을 통한 방문상담인 경우에 최소한의 교통비지원이나, 부모 들이 함께 모일 수 만남의 기회 제공, 교육 제공 등과 같이 부모 동료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예산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6-3-3> 동료상담 활동지원에 대한 주요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동료상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동료상담이 이루어질 때 상담자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수 없이 자원봉사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 상담에 대한 직접적 지불보다 참여자 교육이나 운영을 위해 예산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부모의 활동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되면 지원활동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한 사례 당 교통비를 포함해서 2만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음

이와 더불어 동료 상담활동은 단순히 일대일 면담 방식만이 아니라 집단 만남, 온라인 및 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떤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제4절 시행방안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적 근거 및 주요 검토 사항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1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서 전문가에 의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 ‘동료 상담’을 시행규칙(제21조)에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 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동료상담이 가지는 의미와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동료 상담에서 ‘지원 부모’의 자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체계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에 부모동료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유사한 장애자녀를 키워낸 발달장애인 부모가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효능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발달장애인 부모의 역량강화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 제공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관련 정보 제공
-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의 지지체계 구축

3.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기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료상담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자격기준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모 동료상담’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 동안 정책적으로, 복지실천 현장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가 정보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 동료상담은 일반적인 전문 상담가와 피상담자 간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력적인 활동에 가깝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감에 기초한 정서적 지원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 상담 지원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전문 상담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처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동료 상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다양한 부모들이 참여하고 동료적 지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P2PUSA(parent-to-parent program USA)는 기본적인 교육내

용을 이수하는 것으로 지원부모의 활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최대 2~3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실시된 몇몇 부모결연프로그램에서도 10시간 내외의 비교적 간단한 교육 후 선배 부모와 후배 부모간의 멘토-멘티간의 관계를 맺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모 동료상담이 제공된다고 할 때 지원부모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엄격한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경청 및 대화기술, 지역사회자원 이해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시간도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여 20시간 교육을 최소 조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4. 부모 동료상담 사업 운영 방안

가. 사업 수행 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서비스 제공은 상담지원욕구를 가진 부모와 지원 부모 간의 적절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때,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향후 전국적으로 설치 마련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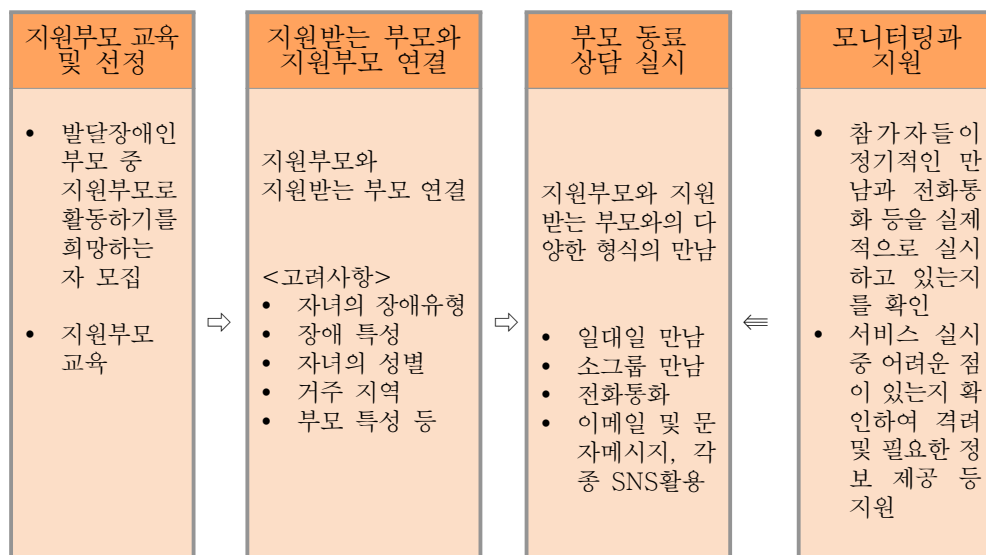
사업 수행기관 지원(안)

- 수행기관 1개 당 약 50,000천원 사업비 지원
 - 인건비 30,000,000원(코디네이터 1인 2,500,000원×12월)
 - 참여부모 교육비 8,000,000원 (강사료 200,000원×20시간×연 2회)
 - 기타 운영비 12,000,000원 (지원 부모 교통비, 회의비 등)

나. 사업 내용 및 절차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사업의 실행 방안을 사업내용과 절차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6-4-1]과 같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1) 지원 부모 교육 및 선정, (2)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하는 부모 연결, (3) 부모동료상담 실시의 순서로 진행되며, 부모동료상담 중 ‘모니터링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4-1] 사업 내용 및 절차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업 수행 기관이 각 단계별로 추진할 주요 업무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지원 부모 교육 및 선정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 일정정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부모를 선정하도록 한다.

지원 부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해외 사례를 준하여 20시간의 사전 부모 동료상

담 교육 최소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교육은 발달장애의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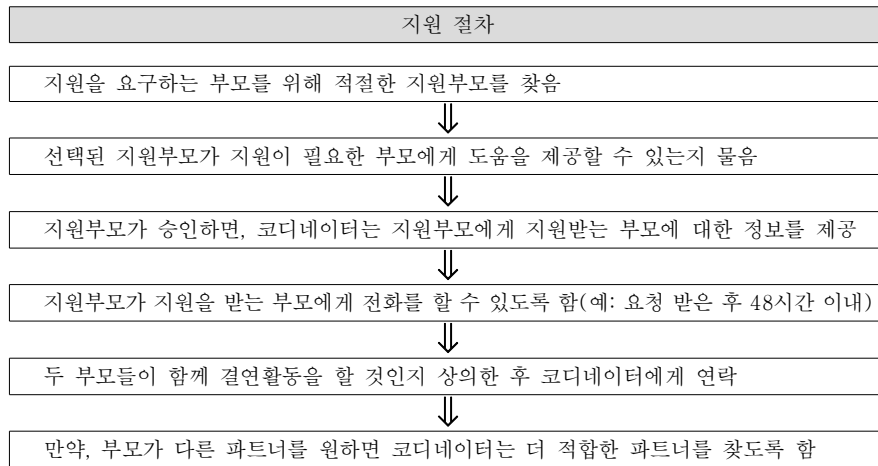
<표 6-4-1> 지원부모 사전 교육과정(안)

구분	교육내용	이수시간 (총20시간)
장애와 가족의 이해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장애아동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 적응의 주기	2
상담의 기초	자기 이해	2
	효과적인 듣기 기술, 말하기 기술, 비밀보장의 중요성	3
	스트레스 대처 전략	2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에 의한 상담 소개 및 지역사회 정보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의 이해	2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및 권리 등	2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 가족이 활용 가능한 정보	2
상담 실습	상담 실습	3

2) 지원부모와 지원받는 부모 연결

발달장애자녀의 장애 유형, 가족 상황, 지리적 근접성, 즉각적 지원 가능성, 자녀 성별 및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부모와 지원받는 부모를 연결하도록 한다. 이 연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6-4-2] 지원 절차



3)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실시

지원 부모와 지원 받는 부모 간에 결연관계가 성립될 경우, 담당 코디네이터는 통하여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진행 내용 및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한다.

<표 6-4-2> 동료 상담 방법의 예시

구분	내용
일대일 만남	2주에 1회 이상 만남을 통한 이야기 나누기
집단 만남	지원부모들과 지원받는 부모들의 소그룹 활동
전화 통화	지원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전화
기타 방법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SNS를 활용한 지원

제 7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가지 영역별(평생교육, 후견법인, 위기발달장애인조치, 자조단체, 부모동료상담) 주요 서비스 내용과 시행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기초생활기술마저 점차 잊어버리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 지원은 활성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라는 세 과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각과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하는 교육과정으로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개 과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인력의 역할 및 자격요건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의 인력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운영관리자, 평생교육 업무(예, 평생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교육대상자 선발, 강사진 수급)를 총괄하는 교육관리자, 발달장애인을 지도하는 기본교육교사 및 교육보조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제공 인력의 자격요건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생교육제공 인력이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및 신고의무

학대나 폭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보호조치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중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 17조(보호조치 등)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 41조, 시행령(제10조)과 시행규칙(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 쉼터의 역할 및 기능, 인력과 시설의 최소기준, 쉼터의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들이 좀 더 명확히 검토되어야만 한다. 먼저 쉼터의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혹은 소규모 거주시설들 중 일부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기관이 위기발달장애인 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입소기간을 7일 이내와 최대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시 및 단기보호 서비스만 가능한 실정이나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할 때 쉼터의 기능은 일시보호, 단기보호, 중장기보호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 쉼터마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쉼터는 위기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학대 심각성에 따라 인력지원 기준을 고려하되, 최소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쉼터 입소 직후 적절한 의료 및 심리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구축을 지향하며 위기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개별 공간 제공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기발달장애인에 대한 총괄관리 및 점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쉼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신고의무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주체, 교육내용과 시행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담당주체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 교사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학대의 개념 및 학대 민감성에 대한 교육, 위기발달장애인 발견 시 초기 대응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된 법을 2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성년후견법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후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후견법인을 지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3조). 향후 후견법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견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정요건 및 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법 상의 후견법인은 일반 후견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후견사업의 수행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후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지정될 후견법인은 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청구, 후견인 후보자 추천, 후견서비스 및 후견감독서비스 제공, 후견인 후보자 중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의 제반 후견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직접 담당하여 공공시민후견인의 양성을 꾀하는 한편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홍보 및 후견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행해야 할 것이다.

후견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공후견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정절차는 공모사업의 형태를 가지되 후견법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공공후견사업의 목적과 가치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에 대한 정성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성년후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성,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경험과 전문성,

후견인후보자 교육 역량, 지역 내 지원네트워크 구성 역량 등을 고려하여 후견법인을 심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후견법인 지정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후견서비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모든 시도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묶어 추진하고, 향후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임 건수 등의 변화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견법인이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후견업무를 담당할 하나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 및 역할이 어느 정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 및 감독서비스 제공,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 감독을 등 공공후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후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향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후견법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법인에게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바로 의뢰하고, 후견법인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의뢰하는 두 가지 경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자조집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제 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조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한다고 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 자조단체의 범위, 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자조단체를 이제 막 시작하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이들의 자조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해외의 경우도 초기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속한 기관에 의해 지원되다가 경험이 축적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형’으로 발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의 자조단체 활동 전개에 있어 일정정도의 기관지원이나

조력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조단체 활동 지원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조단체 활동 참여자의 자발성, 자조활동 계획 및 내용, 자조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목적성과 자기주도성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조활동’, ‘자조단체 교류’, ‘조력자 교육 및 양성’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자조단체 활동 사업기관은 ‘자조활동’을 필수적 수행하면서 ‘자조단체교류’와 ‘조력자 양성’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조활동’의 경우 자조단체 활동의 실질적인 수행주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면 옹호활동, 사회참여활동, 자립생활향상 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조단체 교류 프로그램은 자조단체 활동 과정에서 타 단체 성원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및 해외 자조단체와의 교류,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준비 및 참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조력자 교육 및 양성의 경우 조력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인권, 자조집단에 대한 전반적 이해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부모동료상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법 제 31조에서는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리지원서비스에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동료상담도 포함시키고 있다(시행규칙 제 21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상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료상담 ‘지원 부모’의 자격,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동료상담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모 동료상담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력적인 활동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동료상담지원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전문상담가의 자격조건처럼 엄격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경청 및 대화기술,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자원 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20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부모들이 동료 상담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상담 서비스 제공은 상담지원 욕구를 가진 부모와 지원부모의 적절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전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일임하거나 혹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수행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역할은 지원부모 교육 및 선정, 지원부모와 지원받는 부모의 연결, 부모동료상담 진행 내용 및 과정의 모니터링 제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 고영복(편).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교육부(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2). 보도자료(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구본용, 외 2인(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국립특수교육원(2011). 특수교육 실태 국제동향.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 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광은(1992).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옥, 김용득, 김동기, 유재윤, 이은실(2015). 배분의제 성과지표개발연구-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두영, 박원희(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pp.245~271.
- 김순영(2011). 여성장애인의 동료상담 교육이 자립생활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행정 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1990). Peer Counselor활동에 관한 일 연구. 지도상담, 14, pp.43-50.
- 김진우, 김고운, 김미옥, 김용득, 김행란(2014). 발달장애인복지론. 서울: EM커뮤니티.
- 김진화 외 6명(2011).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김태창(1985). 또래에 의한 집중적 집단 상담이 남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5).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화 구축 방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송남영, 김성철, 강민희(2014). 우리들의 자조모임: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자조모임 안내책.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양미진, 송미경, 신효정(2009).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8-31.
- 오정인 (1983). 도움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비전문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유근준(2001). 기독교인의 동료상담자 훈련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윤용준(1987).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이경준(2006). 장애인 자조모임의 발전과정 분석과 자립생활에의 실천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관용, 김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 카운슬링. 학생연구, 19, pp.18-29.
- 이동석, 외 7명(2014). 장애와 학대.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수용, 문길린(1990).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집단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상담, 14, pp.1-42.
- 이승현(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충청.
- 이영규(2012).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법합논총, 29(4), pp.347-370.
- 이원숙 (2007).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은미(1991). 동료상담자 훈련경험이 내담자의 교우관계와 학교관련태도에 미치는 효과, 상담과 지도, 제26집, 한국카운슬러협회, 184-206.
- 이형득, 김정희(1983). Peer Group Counselor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pp.41-63.
- 임기현(2003).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일본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2015).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00~2014년.
- 일본 후생노동성(2013). 시민후견제도의 보급 촉진.
- 전병주, 김건호(2013).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pp.187-197.
- 전혜인(2005). 부모결연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능력강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1), pp.267-280.
- 전혜인, 박지연(2004).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가족지원에 관한 문헌고찰: 1995년-200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pp.117-137.
- 전혜인, 박지연(2005).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정신지체학생 어머니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pp.81-109.
- 전혜인, 박지연(2006).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경험.

- 특수교육학연구 41(1), pp.233-252.
- 정동영(2012). 미국의 발달장애학생 중등과정 이후 교육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지훈(2013). 동료상담서비스와 가족관계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춘옥(1989). 상담전문가와 또래상담자간의 상담집단 효과비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장혁표(1986). 동료 집단상담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연구보, 22,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35-49.
- 추석호(1987). 동료집단상담장면에서 의사소통기술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최규섭(1988). 고교생을 위한 또래상담집단과 전문가 집단상담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최복천, 외 12명(2014).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최복천(2012).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지원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2년 9월 13일.
- 최복천, 성명진, 조윤경, 백정연(2014).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분석 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 최복천, 이미정, 윤은호 외(2013).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 최은영(1992). 동료상담자에 의한 주장훈련이 대학생의 자기주장과 자아실현정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한국장애인개발원a(2014).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b(2014). 증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1). 행정안전부 지원 전국 장애인활동가를 위한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사업 자료집. 서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숙자(2011).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 상담. 17, 9-43.
- 홍경자, 김선남(1986). 또래상담자 경험이 또래 상담자 자신의 자아실현도, 인간관계능력, 자기발표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8, pp.97-116.

- 홍경자, 노안녕(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 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17, pp.43-59.
- Allen, D. A. (1973). Peer counsel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Journal*, 21, 35-40.
- Atherton, H. L & Crickmore, D.J. (2012). *Learning Disabilities Toward Inclusion*, Churchill Livingstorn.
- Beach Center on Disability (2015). <http://www.beachcenter.org>.
- Bokrman, T. (1976). Expereiential Knowlege: A Cencepts for the analysis of self-help groups. *Social Review*, 50(3). pp 445-456.
- Brown, H., & Turk, V. (1992). Difining sexual abuse as it affects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Mental Handicap*, 20, pp. 44~55
- Frisz, R. H.(1984), The perceived influence of a peer advisement program on a group of its former peer advisers, *Personnel and Guidance*, 62, 616-619.
- Gray, H. D. & Tindall, J. A (1978). Peer counseling: An in-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Inc. 설기문(1991). 동료상담훈련론. 형설출판사.
- Grigal, M., & Hart, D.(2009). Think college: Postsecondary education option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ltimore, MD:Paul H. Brookes.
- Hart, D., Grigal, M., Sax, C., Martinez, D., & Will, M.(2006). Postsecondary education optiona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to Practice*, 45, 1~4.
- Hendricks, D., & Wehman, P.(2009).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for youth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4, 77~78.
- Herbert, M. J., Klemm, D., & Schimanski, C.(1999). Giving the gift of support from Parent to Parent. *Exceptional Parent*, Aug.
- Ireys, H. T., Chernoff, R., Stein, R. E. K., DeVet, K. A., & Silver, E. J. (2001). Outcomes of community-based family support: Lesson learned from a decade of randomized trials. *Children's Service: Social Policy, Research, and Practice*, 4(4), 203-216.
- Katz, A. H., & Bender, E. I. (1976). *The strength in us: self-help groups in the morden world*. NY: New Viewpoints.

- Kirst-Ashman, K. K., & Hull, Jr., G. H. (2002), *Understanding Generalist Practice*(3rd eds), Brooks/Cole.
- Köhl/Engels(2009). *Rechtliche Betreuung in Deutschland*, Bundesanzeiger.
- NASW. (1999).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이문국(역). 2004. *사회복지대백과사전*. 서울: 나눔의 집.
- Painter, C. (1989). *Friends helping friends: A manual for peer counselors*. Minneapolis: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Prince, D., & Jenkins, D(2005). *Building pathways to success for low-skill adult students: Lessons for community college policy and practice from a statewide longitudinal tracking study*.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25, 1-4.
- Smith, D. H., & Pillemer, K. (1983). Self help groups a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5(2).
- Stewart, M, (1990). Professional interface with mutual-aid self-help groups: A review. *Social Science*, 31(10), 1143-1158.
- Santelli, B., DiVenere, N., Yoder, J., & Carolis, K. D.(2000a). Supporting parents: The cornerstone of parent to parent. *Exceptional Parent*, Feb, 66-68.
- Santelli, B., Poyadue, F. S., & Young, J. L. (2001). *The parent to parent handbook: Connecting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Baltimore, MD.
- Santelli, B., Turnbull, A., Lerner, F., & Marquis, J.(1993). Parent to Parent program: A unique form of mutual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 Singer & L. Powers(Eds.), *Families, disabilities, and empowerment: Active coping skills and strategies for family intervention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antelli, B., Turnbull, A., Marquis, J., & Lerner, E. (2000b). Statewide Parent-to-Parent program: Partners in early interventi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13(1), 74-88.
- Santelli, B., Turnbull, A., Marquis, J. & Lerner, E. (1997). Parent-to-Parent program: A resource for parent and professional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1), 73-83.

- Singer, G. S., Marquis, J., Powers, L., Blanchard, L., Divenere, N., Santelli, B., Ainbinder, J. G., & Sharp, M. (1999). A multi-site evaluation of Parent to Parent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2(3), 217-229.
- Zastrow, C. H. (2008). *Social work with group: A comprehensive workbook*. CA:Cengage Learning.
- Köller/Engels, *Rechtliche Betreuung in Deutschland*, Bundesanzeiger, 2009
- Jürgens, *Betreuungsrecht*, 4. Aufl., C.H.Beck, 2010
- Zimmermann, *Betreuungsrecht von A-Z*, 3. Aufl. 2007
- http://www.cao.go.jp/consumer/iinkai/2013/118/doc/118_130423_shiryoku3.pdf
- Tindall, A. J. & Gray, H. D.(1985),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 Accelerated Development.
- 山口縣(2014).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
- 山口理恵子(2009).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における運用上の課題, 京都光華女子大学研究紀要 / 京都光華女子大学 編, 掲載号47
- 厚生労働省 社会・援護局 障害保健福祉部(2015). 障害者福祉施設等における障害者虐待の防止と対応の手引き
- <http://www.fub.se/>
- <http://www.mhlw.go.jp>
- <http://www.missouripeoplefirst.org/>
- <http://www.noinboho.org>
- <http://www.sabeusa.org/>
- <http://www.peoplefirstca.org/index.htm>
- <http://www.peoplefirst.org.nz/>